

교육개발

2013
Spring
Vol.40 No.1

파워 인터뷰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특별기획 -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자녀와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시스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추진
대입 간소화를 위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KUCAS)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이슈와 전망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방향과 실행방안

포커스

2013년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쟁점 및 법안 처리 전망

정책과 현장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정책모형과 성과, 과제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06



20



60



72



84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영숙(위원장), 김주아, 문성룡, 박병영,
 박성호, 신혜숙, 이선호, 임후남, 정혜승,
 전인식, 정바울
 편집실 | 정미영, 한지연, 이훈, 정지영, 양인실
 디자인·인쇄 | 자성토탈 02-2272-828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3년 4월 1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변경 | 2013년 1월 23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06 파워 인터뷰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14 특별기획 -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자녀와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시스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팀장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김정민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절감형지원팀 팀장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추진

박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대입 간소화를 위한 한국형 공동원서접수(KUCAS)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김미란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44 세계의 교육

독일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

서민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열린 교육, 아이폰에서 노벨상까지 - 일본 츠크바대학교

윤샘이나 / 서울신문 기자

애국심과 인류애로 글로벌 리더를 키우다 - 중국 상하이한국학교

김윤기 / 교육부 교육연구사

66 이슈와 전망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방향과 실행방안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실장

72 포커스

2013년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쟁점 및 법안 처리 전망

이원근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분야 수석전문위원

78 정책과 현장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정책모형과 성과, 과제

이영선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84 현장르포

폐교 걱정하던 농촌학교 ... 사교육 걱정없는 '행복학교' 로

- 대구 가창초등학교

한찬규 / 서울신문 편집국 메트로부 기자

인성교육의 힘! 소통의 장 열리고 성적도 '쑥쑥'

- 서울 연서중학교

김수현 / 국민일보 기자

전문직 교육으로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 취업률 120%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위성욱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1년은 현장서 실습 ... 선진국형 4+1학년제 국내 첫 도입

- 한양대학교 경기 안산 에리카(ERICA) 캠퍼스

김희균 / 동아일보 기자

세계수준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의 방향

—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중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현대적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 이익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학자들에게 홍익인간을 해석해 보라고 하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홍익인간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넷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데카르트(R. Descartes, 1596 - 1650) 이후,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 위주의 교육’이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가 모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교육체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준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 위주의 교육’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은 곧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변화가 뒤따를 때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생태

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서 그 용만 승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천에 남아 있는 것을 상상하기보다, 개천의 생태를 잘 가꾸어서 개천 자체를 모든 구성원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특성을 잘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개별화,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교육문제는 한국가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서울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3,000명이 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국적 수가 100개 국 이상이 되었고, 서울대 학부에 지원하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수가 약 700개에 달할 정도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학생들 간의 경쟁에만 몰두해 온 경향이 있었다. 국내 학생들 간의 경쟁은 결국 지나친 배타적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비의 팽창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교사 간, 학교 간, 지역 간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급 학교에서는 점수 위주의 입학전형에서 잠재력 위주의 입학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잠재력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학전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수연구(trend analysis)를 통한 체계적인 질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하듯이,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성과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하지는 않듯이,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 추가적인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비용과 고통을 부담하는 용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파·워·인·터·뷰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대담_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POWER | INTERVIEW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교사의 지도권 등 다른 가치와 조화 이뤄야 올바른 교육 할 수 있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꿈 키우는 싱킹교육 할 것”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는 학교평가와 통합하는 것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또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명령규정이나 선언의 문제가 아니며, 교사의 지도권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이어 학교폭력과 관련, “폭력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며,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폭력은 자칫 학생의 인생 전체를 황폐화시킬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대책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방안, 가해 학생에 대한 개별화 상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또 혁신학교에 대해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바람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는 모습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혁신학교가 서울교육에서 제 몫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일련의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피력했다. 문 교육감은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찰과 다짐의 계기이자 꿈을 일구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담아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교육열”이라며,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하지만 “우리 교육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Teaching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은 Teaching에서 학생 스스로 배우게 하겠다는 Learning을 거쳐, Thinking으로 가야 하며,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도 집어 넣는 교육에서 끄집어 내는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3월 13일(수) 서울 종로구 송월길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문용린 교육감을 만나 취임 100일의 소감과 서울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 한국교육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바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지난 2월 6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하셨는데,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로드맵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백순근 원장 : 이달 말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매주 2~3개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과 여건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의 시간은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지녀야 할 책무와 자세가 무엇인지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학 교수, 교육부 장관에 이어,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세 분야가 같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요. 이른바 ‘교육 3관왕’을 이룬 입장에서 특별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육학자에게 하실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문용린 교육감 :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수 모두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교수로 있을 때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으로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더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도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감은 실제로 학교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실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각각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세울 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부는 교육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도교육청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학부모나 학생, 또는 학교 현장에 사업의 취지나 방법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상호 공감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2월 6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하셨는데,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로드맵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은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와 합심하여 교육공동체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위해서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점프 업(Jump up) 및 서울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를,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 드리고, 긍지와 보람을 찾아 드리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학교평가에의 통합 운영,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마련, △교권보호대책 수립, △학교폭력 대책 마련, △혁신학교 평가 통한 존폐여부 결정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은데, 어떤 복안이랄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주요 현안도 있다면 포함시켜서 현안별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먼저 학교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목적이나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것들은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발전을 위해 평가는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평가가 많으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합을 하여 내실을 기하는 편이 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명령규정이나 선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문제인 것이지요. 학생인권조례는 또 하나의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학생들이 선언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인권조례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일부를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해해서 그

렇지요. 학생인권조례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소지품 검사도 못 하고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은 교사의 지도권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참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그대로 두고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선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입니다만, 학교 차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학을 시키는 등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학생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바뀐 환경에서 학생을 선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교권보호책임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은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와 합심하여 교육공동체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새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약이 유사한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앞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을 지정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침해 상황에 따라 4단계로 단계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 폭력은 자칫 그 학생의 인생 전체를 황폐화시킬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방안, 가해 학생에 대한 개별화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왜 우리는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교육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바람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는 모습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혁신학교가 서울 교육에서 제 몫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최근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취미에 맞는 꿈을 가져야 공부를 하거나 체험 활동을 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며, 그래야 그 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바로 학생 개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함으로써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주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과 직업세계의 체험을 통해 교과지식이 현실적 삶과 연계되는 진로탐색 시기를 마련해 주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교과에서 '진로탐색 중심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진로교육과 관련 있는 단원 학습을 할 때, 수업 시작 전 또는 수업 중에 5분 내외로 진로와 연계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로와 직업'을 비롯한 다양한 진로탐색 교과목 수업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도 확대 운영하면서 그 초점을 진로탐색에 맞출 것입니다. 1학년 때 학생들이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간고사는 진로탐색과 관련된 다양할 활동 등을 수행평가로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기말고사에서만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험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주요 학습요소를 묻는 방식으로 평가 방향을 유도하여 시험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 행복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새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약이 유사한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앞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문용린 교육감 : 무엇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구체

적인 운영내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습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6년의 학교생활 계획서를 스스로 구상해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찰과 다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년과 단절된 별도의 학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나머지 5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활동기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담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학년들과 유리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한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소질을 발견하고 꿈을 설정하기에 한 학기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본래 이 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단순히 학습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6년의 학교생활 계획서를 스스로 구상해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찰과 다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담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학계나 일선 행정업무에서 늘 인성과 정서, 행복에 관한 교육론을 주창해 오셨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계에 해주실 조언이나 당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를 마련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점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분야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장려 또는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용린 교육감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는 마땅히 유지시키고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교육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Teaching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Teaching에서 학생 스스로 배우게 하겠다는 Learning을 거쳐, Thinking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Teaching에서 Learning으로, Learning에서 Thinking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무엇보다도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끼와 꿈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적성과 소질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분명한 꿈이 있으면 공부도 학교생활도 모두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울러 자신의 꿈과 다르게 일반고에 진학하여 좌절 속에서 보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 점프 업(Jump Up) 프로그램’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그동안 학계나 일선 행정업무에서 늘 인성과 정서, 행복에 관한 교육론을 주창해 오셨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계에 해주실 조언이나 당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이 있고, 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책무와 권한이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학부모로서의 권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교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정책만큼은 새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부인도 교육심리학자이셔서 두 분께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강요하지 않되 방임하지 않는 것이 저의 자녀교육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언을 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가시기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3년 정도 연구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린 교육감 :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 교육이 당면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점프 업(Jump Up)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이 있고, 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책무와 권한이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학부모로서의 권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1947년 경기 여주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교육심리)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과외사교육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교육부 장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아시아 태평양 교육 리뷰(APER)' 편집위원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문화예술훈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이며,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교육감으로 재임 중에 있다. 국민포장('87), 국민훈장 동백장('98), 청소근정훈장('03)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도덕과 교육>, <지력혁명>,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 <EQ가 보이면 성공이 보인다>, <21세기 문화시민운동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외 다수가 있다.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I

자녀와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시스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글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팀장

I.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 강화의 필요성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방과후학교는 2006년부터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심화되는 사회양극화현상의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 증가
 -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학교' 필요
-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2006년 이후 방과후학교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도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아침·오후·저녁에 돌보아주는 초등(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지자체·교육청 공동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연합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공공성을 갖추고 우수한 자원을 가진 언론기관 및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구현, 방과후 방치되는 학생에 대한 돌봄 제공, 계층간·지

역간 교육격차 해소, 여성인력 활용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 2006년 이후 방과후학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2006년 41.9%의 초·중등학생이 참여하였던 방과후학교는 2012년 71.9%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방치되는 학생들을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보호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특히, 연령이 어려서 부모의 보호없이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였다. 또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들 중 생업을 위해 밤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59,248 명으로, 대부분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5.4%이며, 1~3학년 학생 수 대비 11.9%, 1~2학년 학생 수 대비 18.3%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11. 12)에 의하면, 초등학생 학부모의 20.4%가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36.7%는 3학년까지, 학부모의 24.2%는 6학년까지 돌봄교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부모들의 29.9%는 오후 5시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들의 91.8%는 7시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교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후 자녀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자녀보다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12)의 2011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71.0%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이다. 방과후에 자녀를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보다 안정적인 가정경제 구축, 자녀의 출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각한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이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 제공(온종일 돌봄학교)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급식 등을 무료로 제공
- 필요한 학생들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프로그램 제공(온종일 돌봄교실)

현재 오후에 주로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오후 돌봄), 그리고 2011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생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2년 현재 초등학생들은 주당 평균 1.8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4시간 이내이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나머지 시간 동안 학생은 방치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보호를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친지 등 학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없거나,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귀가 시까지 방치되게 된다.

둘째,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주 내내 부모가 귀가 시까지 수강료를 내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크다. 2012년 현재 초등학교생들은 월 평균 1.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매일 5시나 6시까지 주 5일 동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비용부담이 크게 된다.

셋째, 부모 모두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 늦게 귀가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비하여,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06:30~09:00), 오후돌봄(12:00~18:00), 저녁돌봄(18:00~22:00)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1,000개 교실, 2012년에는 1,700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3,994명(중복인원)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2,0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교실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201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77.4%는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3학년이 되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I. 초등학교 돌봄기능의 성공적 정착방안

원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프로그램과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10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돌



봄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과 관련된 학교의 업무부담은 현재도 적지 않다. 온종일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학교, 교원의 많은 업무부담은 정규교육과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지원인력 제공,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부서 설치, 프로그램 위탁운영 확대, 지역사회 자원(기관, 단체, 개인 등)의 지원 및 참여 확대, 강사풀 구축 및 제공,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지니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는 보다 많은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참여·연계를 필요로 한

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참여시키며, 학교와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는 정부부처별로 수행되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들을 서로 연계 지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협력하여 중앙과 지역에 '방과후 돌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전남 나주시, 경기 성남시, 울산 울주군, 전북 진안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독립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확실한 학생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학생 안전시스템이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과 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가 학생 안전문제이다. 예를 들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뽑은 것이 안전문제이다. 방과후학교 안전운영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학교지킴이 확보, CCTV 설치, 안전전문업체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경찰, 방범대, 어머니회, 버스·택시회사 등)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새롭게 제시된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는 단계적,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간다. 온종일 돌봄학교의 도입은 초등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주로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일부 학교에서는 중학년, 고학년이 참여하기도 하나, 이는 저학년 학생이 부족한 경우임), 대개 학교당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교실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만 선정되어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여건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무료 참여학생 66.4%, 유료 참여학생 33.6%이다. 학생들은 돌봄교실에서 지도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돌봄교실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의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전체 무료로 운영되며,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참여시키게 된다.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현재 돌봄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과 중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가미될 수 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기존의 돌봄교실에 비해 참여학생의 수와 대상학년이 많아지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유료나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기존에 학교에






서 운영되어 오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공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거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여 참여해 온 교과학습 프로그램, 일부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의 조직, 인력, 업무, 예산, 방과후의 교실 운영 등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원의 생활과 학생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의 추진은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의 투입으로, 학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학교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2학년 적용, 2015년 3~4학년 적용, 2016년 5~6학년 적용의 단계를 거쳐 2016년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2013년에는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연구와 이에 따른 시범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 동안 사전연구, 시범운영, 관계자의 이해와 참여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과 연수, 운영실태 모니터링, 문제점 및 성과분석, 개선방안 모색 등이 질 높게 이루어져 온종일 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온종일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는 1~6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돌봄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학생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개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내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발굴해 보급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돌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돌봄 프로그램이 학생 참여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게 할 수 있다

여섯째,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강사료, 급식비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방과후학교를 위해 국가, 사회는 많은 예산과 인력,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공교육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방과후학교가 보다 안정적으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튼튼한 제도적 근거 즉,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국가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보다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II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글

김정민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절감형지원팀 팀장

I. 들어가며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효과가 높은 한 두 가지 대응책을 찾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사교육 현황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해 볼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교육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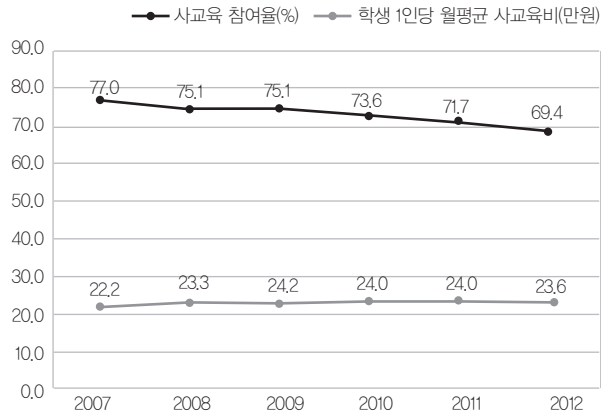
1.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현황

2012년 통계청 조사 결과(통계청, 2012년)에 따르면, 2012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천원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1년 20.1조에서 1조 가량(전년 대비 5.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24만원보다 4천원(전년대비 1.7%) 줄어 들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2011년보다 2.3%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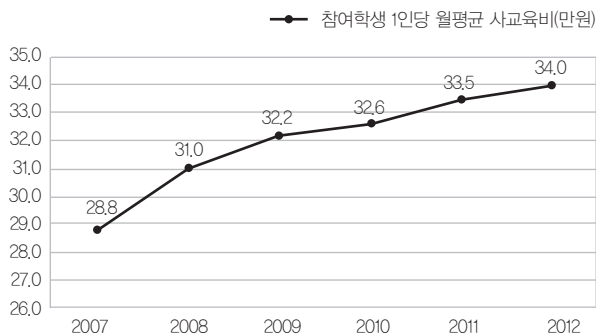
사교육비 총액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부터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그림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한편, 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바탕으로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¹⁾를 산출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28.8만원에서 2011년 33.5만원, 2012년 34만원으로 상승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소비자물가지수,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2]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표1> 교육관련 물가지수

기본 분류 지수	연도	2010	2011	2012
소비물가지수		100.0	104.0	106.3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		100.0	103.3	107.9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2012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2011년의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2010년 대비 102.8%이며,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104.3%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나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 상승분보다 낮아 실질 상승률로 볼 때는 오히려 다소 하락한 수치다.

정리하면,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의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학생의 약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학생 1명당 평균 34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2인 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크다.

2. 사교육 수강 목적 및 소득수준별 현황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 사교육을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으로 나누어 수강목적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의 수강목적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교수업 보충'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선행학습', '진학준비', '불안심리', '보육'의 순서이다.

'학교수업 보충'을 제외하고, 초등학생은 '선행학습', '불안심리', '진학준비', '보육'의 순으로, 중학생은 '선행학습',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며,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참여율로 나누어 산출 가능함.

〈표2〉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복수 응답)

(단위 : %)

구분	진학 준비	불안 심리	선행 학습	학교 수업 보충	보육	기타	
전체	25.1	18.9	42.5	73.0	4.4	5.1	
학교급	초등학교	12.1	21.3	50.7	70.4	9.0	7.7
	중학교	23.7	19.5	41.1	80.1	-	3.4
	고등학교	57.8	12.4	25.3	68.3	-	1.5
	일반고	57.7	12.5	25.5	68.5	-	1.4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진학준비’, ‘불안심리’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진학준비’, ‘선행학습’, ‘불안심리’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생의 경우, 진학준비의 부담은 적은 반면 ‘보육’의 측면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9%를 차지하였다. 초·중학생은 ‘선행학습’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은 ‘진학준비’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체능 및 취미나 교양 관련 사교육의 수강목적은 응답 전체를 보면, ‘취미·교양재능개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학준비’, ‘친구 사귀기’, ‘학교수업 보충’, ‘보육’의 순서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과 관련 사교육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육’의 측면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11.7%를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의 목적에서도 역시 ‘진학준비’ 응답의 비율이 초·중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아버지 외벌이의 경우보다는 맞벌이 부모와 어머니 외벌이의 가구에서 응답이 많았다. 한편, ‘친구 사귀기’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비율도 1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표3〉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복수 응답)

(단위 : %)

구분	진학 준비	학교 수업 보충	취미·교양 재능 개발	보육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기타	
전체	12.9	11.9	89.7	8.8	12.6	8.0	
학교급	초등학교	4.3	13.2	94.8	11.7	14.5	8.7
	중학교	18.9	9.0	88.8	-	9.7	7.3
	고등학교	69.4	6.6	52.8	-	2.6	4.2
	일반고	72.4	6.3	50.3	-	2.4	3.8
부모 맞벌이 여부	외벌이	11.6	13.3	90.3	4.1	15.0	8.5
	아버지	10.1	13.7	91.6	3.4	15.9	8.7
	어머니	21.9	10.2	81.6	9.2	8.9	7.0
	맞벌이	14.1	10.5	89.2	13.6	10.3	7.6
	경제활동 안함	23.6	13.5	84.8	2.8	13.8	7.3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표4〉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율,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사교육 참여율(%)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전체	23.6	69.4	34.0
100만원 미만	6.8	33.5	20.3
100 ~ 200만원 미만	11.0	46.3	23.8
200 ~ 300만원 미만	16.8	64.0	26.3
300 ~ 400만원 미만	23.0	74.5	30.9
400 ~ 500만원 미만	28.8	80.1	36.0
500 ~ 600만원 미만	33.2	83.1	40.0
600 ~ 700만원 미만	36.7	84.2	43.6
700만원 이상	42.6	83.8	50.8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대체로 높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낮으나 그에 비해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중산층과 큰 차이 없이 지출되고 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학교 수업의 내용이나 수준이 학생 개인별로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수업도 만족하지만 학습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사교육을 택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초·중학생은 선행학습의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떤 측면에서 선행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셋째, 고등학생은 진학준비를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교과 및 논술, 예체능과목의 학교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진학준비에 부족한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초등학생은 보육의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고,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수업을 보충하거나 보육을 위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보육을 위해 사교육을 수강하는 가구 중에는 어머니 외벌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육이나 친구 사귀기를 위한 사교육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을 볼 때, 저소득

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학생 사교육비와 낮은 사교육 참여율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Ⅲ.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사교육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중단계 학교수업 개선 프로젝트 실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학교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어떤 측면에서 학교수업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참고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교에서 운영한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므로, 학교수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 중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체제 확대 및 선(先)수업 후(後)평가 시스템 정착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학교 밖에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자칫 교과서 중심의 수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중심의 대학입학시험이 있을 때에도 사교육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였고 지식위주의 단순 암기만 강조된다는 폐해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의 학력고사보다 평가도구로서 한 발 나아간 시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이 여전히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학생이 학업에 대한 적성시험(aptitude test)으로서의 수능을 준비하려면 학교 밖에서 그 간격을 메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소재와 참고자료들을 교재로 하여, 체험과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평가에 있어서도,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

은 내용과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내용과 난이도, 변별도 측면에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수행평가가 서술형 문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상황과 최대한 가까운 장면에서 수행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독서 토론 및 논술 교육 확대

자료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논술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다. 외국의 학교교육에서는 토론과 글쓰기를 통한 사고력 신장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교육체제 내의 경쟁적 제도와 문화를 협력적 제도와 문화로 개선

한편, 학교수업에는 만족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체제 내의 경쟁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 역시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경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고등학교의 진학·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또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가 학교 내에서 충분히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한다. 고등학생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적성에 따라 일반 교과 및 논술 또는 예체능 교과의 사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에 맞게 진학·진로 지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교육과 보육의 연계

초등학생 부모 중 일부는 보육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기도 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어머니 외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나 운영시간과 인원 면에서 제한적이어서 학부모도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시설, 보육시설 연계 활용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7. 초등학교 일과 중 또래놀이 기회 확대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예체능 수업시수의 확대로 인해 일부 보완은 되었으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교우관계 개선

을 위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학교운영 사례 중에는, 오전 일과 중 수업 시간 외에 운동장에서 놀이하는 시간을 운영하며 교사들이 안전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다.

8.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제공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 제공 및 우선 이용,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우선 이용, 교육봉사자를 활용한 교내 별도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우선 이용, EBS 교재 무상 제공 등 교내 모든 프로그램과 공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자녀에서 차츰 중산층 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나가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으므로 선행학습이 학생의 학습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은 근본적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업무 지원인력 확대 노력과 함께 추진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정부 부처 간에 협력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III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추진

글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I. 추진 배경 및 경과

2010년 이후 정부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2012년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 사건 등 학생의 안전

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에,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CCTV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교과위 김세연, 김태원, 이상민 의원 등)이 지적되었고, 2012년 6-7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교 내 설치된 CCTV(17,471대)의 96.8%가 화소 50만 미만의 저화질로, 촬영된 화면내용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2013

년 2-3월에 있는 언론보도에서는 학교 안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및 내실화와 학교폭력 대책은 예방교육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이 제안되었다. 이 과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으로서,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생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보호인력 운영을 내실화하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가 핵심사업이 된다. 둘째, 상담·치료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Wee 프로젝트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셋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서 2012년부터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던 ‘어울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국가수준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보급·확대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과제의 주요 핵심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CCTV 확대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강화뿐 아니라 교사의 관심, 주변 학생(방관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II. 현황 및 실천방안

여기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별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실천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주로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새 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교육환경) 자료와 교육부 미간행 자료인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교육부, 2013)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1. 학생위험 제로 학교환경 조성

가.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의 증가로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 지정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2011년 7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통학로에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교사, 집은 부모에 의해 학생안전이 관리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로는 관리수단 및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안전 관련 제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현 제도를 '학교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학교 중심의 통학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식품안전, 보건·위생 안전, 범죄안전 등 학교(주변)환경에서 확보해야 할 학생안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현수단이 제안되어야 한다.

둘째, 통학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200m 또는 300m의 일률적인 범위 설정은 실제 학생 통학로가 이를 벗어나게 되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 SRTS(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 영국 STP(School Travel Plans)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학교별 '통학로 지도'를 작성하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고취약지점은 적절한 교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학로 중심의 학생안전지역(Safety zone)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생의 주 통학로를 분석하여 통학로 중심의 학생안전지역(Safety zone) 지정 방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내 주요 진입 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취약지역 학교 중심 지자체 CCTV 통합관제의 단계적 확대, 경비실 확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재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11,516개교 중 97.5%(11,230교)에 101,177대의 CCTV(교당 평균 9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전체 CCTV 중 약 94%



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저화질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고화질(100만 화소 이상)의 CCTV 추가 설치 및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학교 내 CCTV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 현황('13년 계획 포함)을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4개 시·군·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가 연계·운영 중이며, 전국 5,895개 초등학교 중 2,324개교가 연계('13년 계획 포함, 39.4%)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 내 CCTV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전담인력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비실 운영이 필요하다.

'12년 말 현재 전국 11,559개 초·중·고교 중 33.5%(3,878개교)의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운영 중으로, 향후 교내 CCTV 모니터링,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필요하다.

넷째, 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관점에서의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건물 주변 및 내부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

여 학교폭력 발생에 취약한 실정으로, 교내 사각지대 개선 및 학생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2. 상담·치료 지원 강화

그동안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핵심 정책으로 Wee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1차 안전망인 Wee 클래스(학교단위 설치), 2차 안전망인 Wee 센터(교육지원청 설치),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의 Wee 스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등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Wee 클래스의 경우, 2008년에 530개에서 2010년에 2,530개, 2011년 3,129, 2012년 4,49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박효정,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 및 Wee 클래스는 물론, 상담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후 지원될 필요가 있다.

가.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상담 전문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첫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 및 Wee 클래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11,360개 초·중·고등학교, 178개 교육지원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Wee 클래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이 확대·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Wee 클래스가 단계적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Wee 센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상 상담 증

가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Wee 센터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상의 개인상담,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Wee 프로젝트 기능이 강화(학교폭력, 정서행동특성검사 3차 추수관리 기능,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됨에 따라 1개의 Wee 센터 내 5-6명의 인력이 인근 학교 및 학생을 관리하고 Wee 클래스의 경우 1-2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전교생을 관리하는 등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교육지원청, Wee 센터에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Wee 센터가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현재, 학생들의 우울, 불안, 자살생각, ADHD 등 정서·행동발달문제로 인한 부적응(학업문제, 집단따돌림, 문제행동, 게임·인터넷 중독, 폭력 및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2012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전수조사 결과, 검사학생 76만6천957명 중 10.6%(8만



1천513명)가 1차 선별검사에서 관심으로 분류되어 조사학생 10명당 1명이 '관심군'에 속하며, 2차 선별검사에서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전체 학생의 3.7%(1만7천574명)로 나타나는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정신건강 관리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관심군', '주의군' 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 의뢰된 학생에 대한 심층 사정평가 및 상담, 치료, 복지서비스 등 통합적인 서비스 및 학생의 정서·행동발달 문제 경향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예: 학교폭력 가·피해 징후가 발견된 학생은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담당'에게 인계,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관리)이 필요하며,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필요 시 통합 서비스 지원 범위를 학생의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추진주체 간의 역할 공유 및 협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가 필요하다.

각 추진주체 간 역할 공유 및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전문기관(Wee 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지역 병·의원 등)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관심군' 혹은 '주의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서·행동발달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 및 홍보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2차 선별검사를 받아 주의군으로 구분된 학생들은 Wee 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센터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서 효과적인 심층검사와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병원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와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확대, 인력 확충, 치료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3.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2010년 학교폭력 발생건 수는 7,823건으로 2006년(3,980건)에 비해 2배, 2009년(5,605건)에 비해 1.4배 증가(교육과학기술부, 2012)하였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력(9.6%)뿐만 아니라 언어폭력(33.9%), 집단따돌림(11.4%), 강제적 심부름(11.3%), 사이버 괴롭힘(7.3%) 등 학교폭력 유형도 최근 다양화(한국교육개발원, 2012)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2.1%로 나타나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향(한국교육개발원, 2012)을 보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내용·시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국가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된 추진 배경을 보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 주변 학생(방관자)의 적극적 개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 인증 및 보급 등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이하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이하 ‘어울림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배려,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개발하되, 학년

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모듈화하여 개발하고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별로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교육자료·교재·교구 등을 함께 개발·보급한다.

둘째, 단위학교·민간단체·교육청·중앙부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 개발·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즉, 다양한 기관에서 기 개발·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국가 수준의 맞춤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DB를 구축하여, 검증절차를 통과한 프로그램을 탑재해 단위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국가 수준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2).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미간행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미간행 자료
- 교육부(2013).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미간행 자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
- 박효정(2012). 위기학생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위탁연구 보고서(미간행) 중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지원방안.
- 한국교육개발원(2013). 새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교육환경). 86-99.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IV

대입 간소화를 위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KUCAS)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글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I. 문제의 배경

과거 이명박정부는 고교교육의 획일적 운영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해

대입전형 관리업무 대학협의체로 이관하고 전형요소 반영 비율의 자율화, 수능 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 제공 등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

문가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 위별 특성 등에 따라 대학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김미란 외, 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II):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 방안). 학생부·수능시험·대학별 고사 등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로 인해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했고, 대학에서는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권한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기는 15년, 작게는 40여 차례에 걸쳐 반복된 대입제도의 변천을 보더라도 대입제도 개선의 목적이 모두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의 해소’로 요약된다(김미란 외, 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I):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이러한 명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그러한 명분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수십 차례에 걸친 입시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입은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 주체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요구가 충돌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표1〉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기에서는 현재의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입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한국형 공동원서접수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1〉 대입제도 개선에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사항

구분	기대 요구
제도적 측면	- 고교-대학 연계 기능 - 대입 적격자 선발 기능 - 사회통합적 기능
사회적 측면	- 사교육비 경감 - 문제풀이와 무한경쟁 교육의 개선 :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유의미한 대입 준비 : 적성과 관심에 부합한 진로 선택과 준비 - 대학 서열화의 완화
관련 주체	- 고교 : 교사 평가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 대학 : 선발 자율권 보장 - 학생, 학부모 : 수험 고통의 경감, 지원 선택권 보장, 절차 간소화와 경비 절감, 대입정책(대학의 전형 계획)의 안정적 운영

자료: 정광희 외, 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III):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방안, p.76

II. 문제의 소재

1. 전형의 지나친 복잡성과 전형료 부담

대입자율화의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별로 전형이 다양해지고 수시전형이 크게 늘어나면서(2013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64.4%) 전형이 복잡해지고 대입준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3학년도만 보더라도 대입전형 수는 3,186개(한국대학신문, 2012.09.25.)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전형요소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수능능력시험, 논술, 면접, 인·적성검사, 실기시험,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더해 기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전형방식에서도 단계별 전형, 일괄합산 전형, 혼합 모형 등 대학별·전형유형별 선발모형의 차이는 물론, 대학별 서류양식이 달라 학생·학부모의 정보부재

로 인한 대입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입 전형료가 평균 6만원에 이르고 있어 수시에서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학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설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대입전형 건당 5,000원)가 전형료에 반영되면서 전형료뿐 아니라 진학 관련(전형자료, 개인정보, 어학정보,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2〉 전형료 현황

구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수시 평균	62,438	58,371
정시 평균	42,857	39,167

※ 서울권 사립대(26개대)와 거점 국립대(9개대) 등 대학의 수시·정시 일반전형 기준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 현황과 대응방안.

2. 고교 교원의 진학 및 진로지도 관련 업무의 증가

대입에서 요구되는 많은 서류는 교과담임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담임교사가 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교원의 과중한 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입에서 중요한 학생부의 경우, 기록내용이 교과활동 이외에 비교과활동으로 ①출결 ②수상 ③자격증 및 인증 ④진로지도 ⑤창의적 재량활동 ⑥특별활동 ⑦교외 체험 학습 ⑧독서활동 ⑨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수험생 평가를 위한 비교과활동 프로그램이 중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 학생부 기록의 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업무 또한 고교 교원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이를 기록하기에는 교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교원업무의 과중은 진로지도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성과 흥미에 맞는 선택과목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 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진로지도 시간이 없고 상담시간도 부족하여 진로 및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진로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육성하는 연수기회의 부족과 압도적인 진로 및 진학 지도 교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학생상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사교육 부담

나아가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반영되는 대입 준비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전형유형의 복잡성, 선발모형의 다양성으로 인한 대입 컨설팅은 물론, 대학별 고사 등 정규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경향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의 수가 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와 과학 영역의 교과목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위주의 학습과 그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도입되는 국

어, 수학,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각 대학들이 어떤 수준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응시하려는 여러 대학들이 서로 다른 수준을 요구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수준을 선택해서 응시하고, 또 고교에서는 어느 수준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입시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 늘어나 고교 공교육 내실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성적을 매개로 한 계층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의 확대, 나아가 계층 및 지역 격차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입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 미흡

또한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이 늦어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반영 대학과 같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 개시 6개월 전 공표하고,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 개시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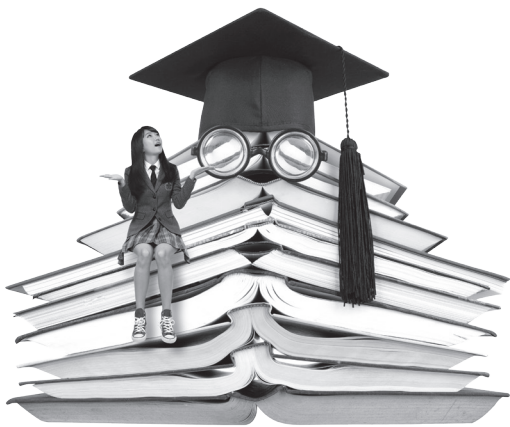
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표 이후에도 대학별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013학년도만 하더라도 모집시기별 모집정원,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인원, 대학별 전형유형, 선발모형을 변경한 경우는 139개 대학, 971건이나 이르고 있어(중앙일보, 2013.01.24.) 대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 도입과 관련해 대학별 반영 방법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Ⅲ. 한국형 공동원서접수(KUCAS: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입전형 간소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원서, 추천서 양식, 전형요소 취합 등의 기능을 가진 웹스톱 지원서 비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형 공동원서접수(KUCAS) 시스템의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KUCAS 운영 프로세스

KUCAS는 지원자 중심의 대입전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원자가 KUCAS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KUCAS에서는 학생들의 지원 서류와 전형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대학은 지원자의 지원 서류와 전형자료를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KUCAS에 통보하고 KUCAS는 이를 지원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그림1]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KUCAS) 운영 예시

2. 관리 주체

KUCAS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해야 하며, KUCAS 시스템 운영에는 대학관계자 뿐 아니라 중등교육관계자(교사, 학부모 등)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지원(서비스) 내용

KUCAS는 대입 전형뿐 아니라 진학지도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대학 및 전공 정보, 추천서 작성지침, 자기소개서 작성지침, 진학 이후의 학자금과 같은 재정지원 안내 등)와 대학 정보 상담 프로그램, 진학 정보 교환, 대학 관계자와의 상담 알선 등 지원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KUCAS를 통한 대입전형(안)

KUCAS 시스템은 먼저 유형이 단순한 정시에서 우선 적용하고 점차 수시모집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시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개 대학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시모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KUCAS를 통한 대입전형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시모집

1. 지원

- 지원자는 KUCAS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최대 6개 대학에 지원
- ※ 모집단위나 모집유형이 다른 경우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따로 계산
- ※ 지원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대학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공동지원서 외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추가 지원서류 제출

2. 지원사항을 대학에 통지

- KUCAS에서는 대학별로 지원자의 지원 서류 및 전형자료를 송부
- 지원자의 타 대학 지원사항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3. 대학의 합격자 선발 및 통지

- 대학은 각각의 모집유형과 모집단위별로 입학사정을 실시한 후 지원자별 합격여부를 결정
- 선발결과를 KUCAS로 통지
- ※ 대학은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명단 외에,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합격자를 우선순위를 두어 KUCAS에 통지

4. 합격 결정 프로세스 진행과 통지

- KUCAS에서는 대학별 합격자 명단과 추가 합격자 명단을 종합하여,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지한 대학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
- 처리결과를 대학에 통보.
- 정원에 미달한 대학에서는 기 제출한 추가 합격자명단 외에 1차례 추가 합격자명단을 추가적으로 제출
- KUCAS는 대학별 추가 합격자명단을 종합하여 합격 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

5. 합격 결정

- 합격여부를 지원자에게 통보.





정시모집

1. 지원

- 지원자는 KUCAS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최대 3개 대학에 지원
 - ※ 모집단위나 모집유형이 다른 경우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따로 계산
 - ※ 지원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대학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공동지원서 외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추가 지원서류 제출
 - ※ 교사 추천서 등은 모집시기별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사항을 대학에 통지

- KUCAS에서는 대학별로 지원자의 지원 서류 및 전형자료를 송부
- 지원자의 타 대학 지원사항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3. 대학의 합격자 선발 및 통지

- 대학은 각각의 모집유형과 모집단위별로 입학사정을 실시한 후 지원자별 합격여부를 결정.
- 선발결과를 KUCAS로 통지
 - ※ 대학은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명단 외에,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합격자를 우선순위를 두어 KUCAS에 통지

4. 합격 결정 프로세스 진행과 통지

- KUCAS에서는 대학별 합격자명단과 추가 합격자명단을 종합하여,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지한 대학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
- 처리결과를 대학에 통보.
- 정원에 미달한 대학에서는 기 제출한 추가 합격자 명단 외에 1차례 추가 합격자 명단을 추가적으로 제출
- KUCAS는 대학별 추가 합격자 명단을 종합하여 합격 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

5. 합격 결정

- 합격여부를 지원자에게 통보

추가모집

1. 정시모집 이후 추가모집 공고와 지원

- 모집 결과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에서는 KUCAS를 통해 추가모집을 실시
- KUCAS에서는 추가모집 모집단위 및 인원을 실시간으로 제공

2. 합격자 결정

-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는 KUCAS를 통해 추가모집 실시 대학에 지원
 - ※ 지원자는 복수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통지를 먼저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KUCAS에서는 지원상황을 대학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지원자에 대한 합격여부를 통지
- KUCAS에서는 합격여부를 지원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입전형 절차가 종료됨.

자료 : 정광희 외, 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방안. p.197-199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함.

5. KUCAS 운영의 기대효과

단순한 원서접수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전형자료를 제출하는 KUCAS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국가수준에서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서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를 관리하여 가계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둘째, 각종 서류(자료)의 제공으로 대학의 대입전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감소를 통해 대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입전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UCAS 운영을 통해 공신력 있는 진학정보를 진학담당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KUCAS를 통해 대입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 기관의 대입 컨설팅 등과 같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자에게 특화된 대입정보의 활용을 통해 사교육업체에 의해 학생의 대입지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실천방안 모색 V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¹⁾



글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적인 면에서 고등교육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를 제쳐 놓고 고등교육정책을 논하기 어렵다. 우리의 지방대학은 201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관 수는 65.6%, 학생 수는 56.8%, 교수 수는 60.4%를 점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 이는 현재 고급 인적 자원의 과반 수 이상을 지방대학이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

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²⁾, 우수한 지역 인재가 해당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수도권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그간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과 연구여건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져 오지 못한 결과,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가 교육공약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 원고는 유현숙·최정윤·서영인이 작성한 한국교육개발원 주체 KEDI 교육정책포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2013년 2월 14일 개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포럼자료 참고 요망.

2) 2010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7.1%, 전체 사업 종사자의 51.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매출액도 수도권은 전국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2011).

II. 지방대학의 위기요인들

현재 지방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나³⁾,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학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이 대입정원을 현재(2010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18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는 대입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 충원률의 저조는 지방대학 재정구조의 영세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경우 지방 국·공립대학은 7,594천원으로 수도권 국·공립 대학에 비해 약 559천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립대학의 경우 지방대학의 경우가 8,266천원, 수도권의 대학이 9,420천원으로 무려 12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정미 외(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81.).

둘째, 학생 미충원 및 지역 인재의 단계적 유출에 따른 위기이다. 2010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지역의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평균 2.3% 낮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3.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지방 고교졸업생의 수도권대학 진학비율은 평균 13.0%에 이르며, 지방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한 숫자는 2,652명으로 전체 편입생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대졸자 전수조사 결과 서울 소재 직장인 중 지방대학 출신의 비율을 살펴보면, 높게는 강원 41.6%부터 낮게는 경남 11.1%까지 나타났다⁴⁾.

셋째, 구조개혁 대상이 지방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2013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들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중 수도권 대학은 9개교, 비수도권 대학은 34개교이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경우 13개교 중 수도권 대학은 2개교, 비수도권 대학은 11개교이고, 경영부실대학 21개교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2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19개교로 나타났다. 구조개혁사업의 평가지표가 교육, 재무,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지표임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운영 면에서 지방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보이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방대학은 38.6명으로 서울소재 대학 30.1명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 논문인용지수, 국내학술지게재, 저술 실적 등 주요 연구성과 지표 전체에 걸쳐 지방대학의 연구성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 기술료 수입, R&D 회수율 등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나타내는 지표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의 지표값은 수도권 대학 지표값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SCI급 논문 수도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3) 1995년 대학 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95년에 327개이던 대학이 2010년에 411개로 대폭 증가함.

4) 장수명(2010). 국·공립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분석.

5) 자세한 현황은 최정윤(2008).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참조.

다섯째, 취업의 질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졸자들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취업의 내용면에서는 전공 불일치 취업, 정규직 취업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2009년 지역별 대졸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서울이 12,150명인 반면, 경기 4,523명, 부산 3,221명, 대구 1,122명, 광주 734명 등으로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낮은 교육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수-학습 만족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역량육성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⁶⁾에 의하면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을 제외하고 대학교육 역량 제반이 수도권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은 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경우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긴밀하다는 것은 지방대학이 갖는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교육의 성과를 반증하는 역량 육성이 미흡한 점은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행·재정적 지원 체제, 법적 기반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는 동시에 산재한 지방대학 발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재정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현장 실무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협력은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도 중요했으나, 앞으로 새로운 지식생산 양식인 Mode 2의 등장⁷⁾, 기업가적 대학의 등장⁸⁾ 등의 관점에서 더욱더 중시되어야 하는 정책 방향이다. 셋째, 지방대학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은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Ⅲ.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지방대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통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대학의 활성화



6) 유현숙 외(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7) Gibbons, M., Limoges, C., Nowotny, H., Schwartzman, S., Scott P., & Trow, M.(1994), The New Production of Knowledge, London, Sage.

8) Etzkowitz, H. and 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 pp.109-123.

잘 가르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은 어떠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

2.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방대학 활성화 방향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우선 고등교육부문의 국정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고등교육예산을 1%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4조원에 이르러 현재 예산 7조 5,000억 원의 2배 수준에 해당한다. 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재정지원과 병행됨으로써 증액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대학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기존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과 지역친화형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의 성과 추이를 점검하면서 동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예산을 통합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명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등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한다.



나. 대학평가 방식의 개선

지방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복무, 학사운영, 연구 및 산학협력 등 대학평가에 관련된 주요 영역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의 실시가 요구된다. 지방의 특정 산업(조선, 항만, 제철, 관광, 자동차 등)과 연계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의 산학협력형', '학부교양 교육형', '국제화 교육형' 등으로 특성화, 유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상대비교에서 절대수준의 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평가는 물론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시 하위 일정비율 또는 순위에 따라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도록 한다. 나아가 투입중심의 평가기준은 지방대학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및 연구 여건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제한하고, 그 대신 대학이 특정 기간 안에 보여준 변화 및 발전의 정도(성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편하도록 한다.

다. 패키지 장학지원사업 추진

우수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특화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통합적,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지방대학생 패키지 장학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중등학교 출신이 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지방대학 우수 졸업자가 역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폭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 지방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비유학 기회 제공, 박사학위 취득 후 지방대학의 교수자원이나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즉, 우수 인재가 초·중등에서 고등에 이르기까지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보장 받는 패키지 장학제도를 실시한다.

라. '지방대학발전위원회(가칭)' 설치·운영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역적이고 단기적이며 대중적인 처방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방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

원법」을 제정하고, 대학의 관계자, 학계 인사, 지역의 기업체 인사, 시민단체 및 학부모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방대학발전기금 조성,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 지방대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모니터링, 국가, 지자체, 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마.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및 지역인재 채용목표 상향 조정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및 인턴 기회를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 졸업생 취업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취업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졸업생의 사후 관리 및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방식의 지역할당 반영, 전형 단계별 가점 부여, 지역별 모집, 추천채용 등 채용 방식은 공공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 세액의 감면, 지역인재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한다.

바. 지역거점대학의 육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 국립대를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거점대학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수준을 높여 이를 전임교원 확보,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지역거점대학에게 해당 지역에 특화된 4-5개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학내 체제를 정비하고 지



역 내 다른 대학이나 유관기관과 연구 및 대학원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 지방대학 · 학부 · 학과의 특성화

지역거점대학, 소규모 명품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글로벌 연합대학 등 지방대학을 ‘대학 단위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ACE사업과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대학들도 대학의 브랜드와 연동된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유사한 인재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양한다. 대학의 특성화는 가능한 한 지역의 산업과 연동된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우수학자의 유치 등 지방대학의 국제화가 각 지역의 특성 및 지방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지역 산학협력사업 추진

실질적 산학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인사제도, 산학협력단 기능, 현장중심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적합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 채용을 확대한다. 교원업적평가나 승진재임용 심사 기준 등 산업계 경력 교원 채용 및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대학인사제도의 내용을 개편한다.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산학협력단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의 요구와 대학의 연구를 연계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대학 지적재산권, 특허 관리, 파트너 업체 발굴 및 대학 보유 기술이전(TLO) 업무 등 전문적인 산학협력단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IV. 나가는 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방대학 활성화방안은 우선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자체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아울러 환경 그리고 인식상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들의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급초과현상이 야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 미충원과 중도 탈락의 속출로 인한 대학운영상의 어려움 등은 이제 지방대학들이 교육의 목표나 운영 등 제 측면에 있어 스스로 구조개혁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의 명료화가 필요하고, 목표에 부합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지방교육 사례의 소개,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학부모와 소비자들의 지방대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World Education

독일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

클

서민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 인성교육의 종합적 성격

인성교육이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시작된 인성교육에 대한 공식적 요구는 2009년 ‘창의·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떠올랐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69번 ‘학교교육 정상화’ 과제의 첫 번째 계획에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말 ‘인성교육(人性教育)’은 그것의 외국어 표현에서부터 미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개념 규정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지만, 간추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심리학 방향의 규정으로서 인성을 영어의 “personality”와 대응시키고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는 인성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하므로,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인성교육이라 한다(이계학, 1996; 최신일, 2008). 둘째는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을 굳이 찾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견해로서, 인성을 인간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인성교육을 전인교육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한다(허경철 외, 1994; 조난심, 1995; 장성모, 1996; 김신일, 2001; 강선보 외, 2008). 세 번째는 인성교육을 도덕성 교육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의 영어 표현을 “Character Education”으로 설정하는 견해이다(윤영돈, 2009; 조강모, 2010; 조난심, 2010; 이명준 외, 2011). 그런데, 5.31 교육개혁안과 ‘창의·인성교육’,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사실상 세 번째 의미에서의 인성교육이다.

도덕성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character education”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도덕 교과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도덕교육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인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다(추병완, 1995). 그런데 미국의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은 학교 외 전문교육기관들이 주도하는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것



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M. 샌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치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 공공기관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교과 내의 한 교과인 도덕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도입된 셈이지만,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은 그 방법론상 하나의 교과로 국한되기 어려운 것이다. 좋은 인성을 함양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제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학생의 일상생활은 학교와 학교 외의 모든 활동에 걸쳐 있다. 더욱이 교과의 성격상 좋은 인성요소 중 몇 가지는 도덕교과가 아닌 교과에서 더 잘 함양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인성교육방안 연구는 도덕교과뿐 아니라 국어, 사회, 한문, 예체능, 기술·가정, 환경 등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제출되었다(이명준 외, 2011; 이미숙 외, 2012 외 다수). 그런 까닭에 인성교육은 그 성격상 학교 내외 및 교과 내외를 아우르는 총체적, 혹은 종합적 성격을 갖는다고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술한 인성교육의 두번째 규정과 세번째 규정은 출발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한 것이 된다. 종합적 성격의 인성교육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경우이다.

II. 독일교육의 인성교육 지향성

독일의 인성교육은 총체적이다. 이 말은 그들의 인성교육이 한두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교육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Charakterbildung)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교육이 전인(全人)으로서의 군자(君子)를 기르려 했던 것과 비슷하다. 몇몇 독일의 학교에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일관된 답변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었다. 굳이 찾는

다면 인근 종교시설에 가서 성직자들에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저소득 국가 돕기 바자회와 같은 활동, 그리고 엄격한 교칙 규율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일 뿐이다. 특별히 인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혹은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명징한 목적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주 교육법들은 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 바덴-뷔어템베르크의 주 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신을 경외하고, 기독교적 자비의 정신을 배우고, 인류애와 평화 애호, 타인 존중 및 향토애를 함양한다. 아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Baden-Wurtemberg, 2007: 112).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은 전쟁 당시 나치의 폐해를 너무나도 깊숙이 인식하여 독재에 대한 혐오, 인류애, 민주주의 등을 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베를린의 학교의 책무 규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나 다른 독재 이데올로기를 혐오하고 민주주의, 평화, 자유, 인간 존엄, 성평등, 자연과의 조화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Berlin, 2004a:28). 초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의 서문에는 해당 학교급의 교육목표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초등교육의





World Education

목표를 열거하는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고 있다 (Berlin, 2004b: 8).

초등교육의 목표에 특히 포함되는 것

- 인간의 사회적 삶과 가치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기
 - 학습의 자기 조절하기
 - 사회 연대를 위해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과 의지
 - 표준어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
 - 읽기 능력과 읽기 전략을 습득하여 텍스트와 친해지기
 - 외국어 구사 능력
 -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기
 - 신체·운동 기능의 발달 및 확장
 - 미적인 표현과 디자인 형태를 구별하기
 - 미디어를 반성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미디어를 설계하기
- (Berlin(2004b). *Rahmenlehrplan Grundschule: Mathematik*, p. 8.)

초등교육의 목표에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가치 지향성, 사회 연대, 협동과 같은 인성교육의 요소를 넣고, 학습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목, 그리고 미술과 미디어 비판 등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은 우리와 사뭇 다른 점이다. 물론 교육법이나 교육 지침, 혹은 교육과정 문서에는 이상적인 것을 실어 놓고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괴리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극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독일의 교육은 그러한 괴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들이 상당 수준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생들이 대단히 앞장선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떠들고 교실에 들어가서도 떠드는 것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복도에서도 과도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없으며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발표식 수업에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꼴찌도 행복한 교실(박성숙, 2010)”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의 교실은 교실붕괴를 염려하는 우리나라의 교실

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

III. 독일교육의 인성교육 지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독일의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그것을 ①저경쟁 교육과 그리고 ②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③엄격한 훈육, ④교사에 대한 신뢰로 보았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경쟁 교육으로 보이며 그것에는 독일의 사회적 조건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1. 저경쟁 교육

독일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독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보낸 한 주부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일에서의 학교경험을 소개한 책 『꼴찌도 행복한 교실』(박성숙, 2010)에서 잘 소개하였듯이, 독일교육은 낮은 경쟁의 교육으로 유명하다. 저경쟁 교육은 느린





진도, 낮은 변별의 평가, 짧은 교과 시간과 긴 방과후 시간(Nachmittagsprogramm)으로 나타난다.

독일에서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이며 능력의 변별도 5~6단계에서 그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 기말고사에는 1(sehr gut), 2(gut), 3(befriedigend) 4(aus-reihend), 5(mangelhaft), 6(ungenügend) 점 중 어느 한 점수가 부여되며, 5점 이하면 승급이 제한된다. 사실상 낙제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모든 시험은 논술형이며, 이를 통해 논리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을 동시에 평가한다. 물론 주관식 논술형의 경우, 평정자의 절대적 권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학습량은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로 적으며, 철저히 기초에만 충실한다. 구구단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며, 나눗셈 등의 세로셈법도 4학년 때 짚어야 스스로 터득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1년을 1에서 20까지만 더하고 빼면서 보내고, 3학년 때까지 한 자리수만 반복하여 곱셈하게 한다. 세로셈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며 그것이 편리하다는 것은 3학년 말이나 4학년 때 짚 가야 알게 된다. 알파벳도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비로소 배우고 1년 내내 알파벳 쓰고 읽는 것만 배운다. 그러나 그 지루한 작업 끝에 4학년 짚 되면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45분을 1시간으로 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의 경우라도 우리와 시수는 비슷하지만, 아침 7시 45분에 1교시를 시작하면 오후 2시 35분이면 교과시간이 끝난다(만하임의 Karl-Friedrich Gymnasium의 경우). 그러면 오후 6시 정도까지 방과후 활동이 진행된다. 4교시까지 하는 초등과정은 11시 15분이면 교과시간이 끝나고 긴 방과후 활동이 시작된다. 방과후 활동은 클럽활동(위 학교의 경우 오케스트라, 사진, 연극, 모형제작, 모형자동차 제작 및 경주 팀 등)이나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보충 수업(위 학교의 경우 독일어 또는 수학), 교



사나 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방과후 활동(위 학교의 경우 합창, 기악, 배드민턴, 축구, 저글링, 신선험기도, 무용, 게임, 발리볼, 자전거, 중국어, 이탈리아어 등)이 가능하다(www.kfg-mannheim.de).

이렇게 저경쟁적인 학교교육 풍토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교사는 경쟁의 부담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하고, 소신껏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구현할 충분한 여지가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한 주간을 정해 아프리카지역 돕기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회나 기타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구 교과(독일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줄고 점차 인성교육의 내용을 담당하는 내용 교과(윤리, 사회, 과학)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서민철, 2012).

2. 학제와 사회적 조건

독일의 저경쟁 교육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저학력자를 충분히 수용하는 탄탄한 독일의 학제가 있다. 독일의 학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뚜렷이 분리된다. 단 4년 과정



World Education

인 초등학교(Grundschule)가 끝나면 자신의 소양에 따라 인문 중등학교(Gymnasium)에 갈 것인지, 실업학교(Realschule)에 갈 것인지, 그리고 아예 직업을 준비하는 일반 학교(Hauptschule)에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반학교에 가면 6년의 중등과정을 마치면 바로 견습생으로 가거나 직업학교와 견습생 생활을 병행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실업학교에 가면 다시 직업상급학교(Fachschule)로 진학하거나 또는 직업학교(Berufsfachschule)로 가서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다. 여기서 일부는 기술대학으로 갈 수도 있다. 통상 김나지움에 들어가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대학(Universität)에 진학한다.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우면 실업학교나 일반학교로 간다.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550만 정도라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Berufliche Schulen)은 270만이 넘는다.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한다(김은숙, 2013). 또한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2011년 114만으로 일반 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인 88만명보다 더 많을 정도이다(www.destatis.de)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학력별 임금 격차는 나지만, 전술한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 격차는 통제된다. 그러므로 학업에 흥미가 없어 실업학교나 일반학교로 가게 되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한 요소가 독일교육에서 학력경쟁이 낮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만큼 인성교육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인문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하더라도 꾸준한 평가를 통해 낙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김나지움에 다니기 힘들어지고, 결국 실업학교로 옮기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일반학교로 옮기게 된다. 그리하여 독일의 김나지움에서 고학년으로 남아 있게 되는 비율



은 25% 정도가 되며 결국 이들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독일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다. 이들은 중등학교 교사나, 정부 관료, 대학 교수 등의 직위를 차지하면서 사회 지도층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신뢰는 확고하다. 교양시민계급의 주도로 근대화가 이룩된 독일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잘 운영되는 직업교육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독일의 사회적 조건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닌 독일의 산업화 특성, 곧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이 강한 폭넓은 복지제도이다.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역할, 그리고 노사 협조적인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 임금 결정을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가 모여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 체제가 정착해 있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어, 노동쟁의가 가장 빈발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에서는 노사분쟁이 거의 없었다(강수돌, 1995; 최형익, 2000).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독일의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를 산출했고, 독일의 저경쟁 사회를 조건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조세부담율도 높고 사회보험 부담율도 높다(독일 GDP 대비 36%, 우리나라 24.5%). 그렇지만 그것은 거의 사회복지 지



출로 돌아온다(독일의 사회지출 비중은 27.4%, 우리나라는 6%). 더욱이 사회지출 중에서도 무능력 급여 비중(2.1%)과 노령 급여 비중(11.7%)이 높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기초적인 생존은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과 블루칼라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대학 졸업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학력별 임금 격차를 보면 고졸자를 100으로 할 때 대졸자의 상대 임금은 167로서 우리나라의 161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나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이전 제도의 효과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더 커서(한국은 -2.2%, 독일은 -9.9%)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후 소득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여유진 외, 2010; OECD, 2010). 그리고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중졸 이하의 상대 임금이 고졸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졸을 100으로 할 때 독일 중졸자의 임금 지수는 90정도로 60인 우리나라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OECD, 2010).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발달이 학교에서의 저경쟁 교육을 낳는 물적 토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의 교육은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매해 약 80-90만명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발생하고 이중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40-50만명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업을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학사학위를 받는 학생은 10만명 정도이다.¹⁾ 그러므로 독일의 교육 체계는 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3. 엄격한 훈육

독일 학생들의 암전함(politeness)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끼게 되는 특징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조용조용했으며 뛰어다니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잠담하고 수다스럽긴 했으나 무례하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되면 조용히 했다. 학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폭력, 폭언 학생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실붕괴' 현상에 비추어 대단히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독일 거주 학부모, 독일 유학 경험자 등에게 묻는 주요 주제였다. 여기에 대해 규칙을 잘 지키는 독일인들의 특성이라는 답변도 있었고, 그들의 철저한 처벌 규정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훈육(discipline)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들 답변 중에 모든 독특한 현상을 국민성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그것이 일리는 있더라도 더 이상의 분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좋은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독일통계(www.destatis.de)의 교육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직업학교를 제외한 각종 고등학교(Gymnasium, Realschule, Hauptschule, Fachhochschule)를 졸업(Abschluss)한 학생은 총 833,353명이었고, 그해 대학 1학년 입학생 수는 485,267명이었다. 그리고 그해 대학 졸업자 수는 94,018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중단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율만 추정할 수 있는데, 고졸자 중 절반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입자 중 20% 정도만 대학을 졸업한다.



World Education

어떤 국민적 성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낸 어떤 조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의 법규정이 체계적이고 처벌 또한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나름대로 그럴 듯한 답변으로 보인다. 물론 법을 잘 지키는 속성이야 국민성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다른 하나의 독특한 답변, 그러면서도 매우 그럴 듯한 답변은 그들의 훈육에 관한 답변이다. 그들은 폭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어릴 때에는 대단히 엄격한 훈육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폐(弊) 금기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금지하는 독일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자녀에게 대단히 엄격한 훈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인성교육의 1차적 책임이 바로 가정에 있다.

독일 학생들의 공손함 뒤에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엄격한 훈육이 있고, 학교에서의 학칙의 엄격한 적용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한 번 하면 바로 정학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학칙 적용이 엄격하다. 폭력이나 폭행, 폭언은 곧바로 학부모에게 연락되어 가정과 학교가 긴밀히 연결된다. 필자가 경험한 것이 김나지움이어서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한 적도 있다. 거기에 대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적어도 50% 이상이 되는 선발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지로 실업학교 같은 곳에 가면 학생들이 보다 폭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실업계 학교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한다.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인성교육적 분위기와, 학교에서의 엄격한 규칙 적용 등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독일인의 특성에 대해 근면성, 질서의식, 성실성 등을 예로 든다. “국민성(national traits)”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을 국민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어떤 제도가 구현되는 밑바탕에는 사회적

제적 조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아니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문화 상대주의라는 전제 하에 조심스럽게 독일인의 국민성으로 질서의식을 꼽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어릴 때부터의 훈육의 결과로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훈육을 시킬 정도로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질서를 잘 지키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교사에 대한 신뢰

독일의 인성교육이 대체로 성공적이게 되는 배경에는 또 하나의 요소로 교사의 높은 권위와 교사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주관식 논술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교사의 판정은 시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교사의 평가를 수긍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저경쟁 상황이 초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김나지움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수용한다는 점, 그리고 대입 자격시험의 판정에서도 그 신뢰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무언가 더 깊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한 답변은 국민성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 독일의 국가형성과정에서 주체로 등장했던 이른바 ‘교양시민계급’(Bildungsbürgertum)의 역할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늦었으며, 대자본가의 형성이 뒤늦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신분을 획득한 공무원집단이 시민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육은 일반 교양교육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구에서 특정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우리나라 조선의 양반과도 흡사한 신분이 독일 근대 국가 형성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몰락한 양반이든 영달한 양반이든 지식인계층은 대중들에게 향촌의 교사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교육을 받은 시민계급은 교수, 교사, 법률가 등 일반시민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시민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했다(조상식, 2008).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중등학교 교사의 처분에 대한 신뢰와 수용은 그러한 전통에 어느 정도의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IV. 우리나라에의 함축

독일의 인성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사회적 조건, 문화적 조건, 학제 시스템 등이 서로 얽혀 끌려오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원인을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독일에 대한 직접 경험이 일천한 필자로서는 되도록 단기적인 것과 관찰 가능한 것을 현상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관찰되기 어려운 것을 배경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인성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일의 근대화과정, 즉 독일 국민국가의 형성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일의 사회발전과정, 혹은 산업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성교육은 경쟁과 상치된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독일의 저경쟁 교육이 독일 인성교육의 성공요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경쟁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관심이 모아질 것인데, 그것은 독일의 사회발전 및 산업화단계와 맞닿아 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독일 근대화과정에서의 교양시민계급의 역할과도 관련된다. 사실상 이것은 교육의 영역을 벗어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단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향후 독일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학교조건이며, 또 교육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한계를 떠안으면서 할 수 있는 교육제도적 측면뿐이다. 그것이라도 잘해낸다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도 얼마간의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에서 독일의 학교제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는 교사의 권위(단, 합리적인)와 자율이요, 둘째는 가정과의 연계이다. 마지막으로 내용 교과과의 비중 확대이다.

최근 체벌금지를 조례에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체벌금지는 당연한 방향이지만, 무례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치방안에



World Education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교실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뿐이다. 무례한 학생의 행동은 나머지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무례한 행동, 폭언, 폭행 학생에 대해 수업권을 박탈하는 권한,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발동하는 교사의 수업 포기권, 그리고 학부모 소환권, 무례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고, 다수 학생의 수업권도 보장할 수 있다. 교사의 권위는 응당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행사는 수업권, 그리고 평가권, 학생의 생활지도권이다. 생활지도에서 늘 학생과 교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체벌금지와 함께 교사에게 부여된 상기한 권한들이 갖추어져야만 균형 잡힌 지도가 가능하다.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는 대체로 학부모의 무례한 행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조항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항은 분쟁 발생 시 교사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학교장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 통제 하에 있는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떠한 생활지도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인성교육이 가정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무례한 학생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모를 곧장 소환하여, 그 지도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엄중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단히 허술하다. 술한 사례가 있는데, 대체로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신체적 기질적 역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우하다 보니 간혹 폭력 교사가 나오는 것이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처리는 학생 전체에 대한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 교육책임을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내용 교과과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 수학 중심의 도구 교과보다는 국어, 그것도 문학 중심의 국어, 그리고 영어도 문학 중심의 영어, 사회과 도덕과, 예술과, 과학과 등의 내용 교과과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인성교육의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





향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에 힘입은 저경쟁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없다면 의미가 무척 적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의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다. 교육이 할 수 있는 바는, 교육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②

참고문헌

- 강선보 외(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쪽.
- 강수돌(1995). 참가형 노사관계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1), 1-33쪽.
- 김신일, 김창대, 남상인, 한승희(2001). 인성교육의 확대와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추진 과제, 연구보고 RR 2000-1-3*, 179-610.
- 김은숙(2012). 독일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양성.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개발*, 39(4), 42-51쪽.
- 박성숙, 2010. *꼭지도 행복한 교실*. 21세기북스.
- 서민철(2012). 독일의 인성교육. *교육정책포럼* 233, 28-32쪽.
- 여유진, 송치호(2010).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6(4), 95-119쪽.
- 윤영돈(2009). 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 : 범교과 학습과 도덕과 학습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29, 127-150쪽.
- 이계학(1996).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학교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 세미나 보고서*, 9-22쪽.
- 이명준 · 진의남 · 서민철(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KICE RRC 2011-7-1*.
- 이미숙 · 양정실 · 김현미 · 황인표(2012).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자료집. *ORM 2012-46*.
- 장성모(1996).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10(1), 119-134쪽.
- 조강모(2010).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관계 설정.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33집, 5-32쪽.
- 조난심(1995). 인성교육과 도덕 교과서.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70-84쪽.
- 조난심(2010). 창·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 초등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 원고, 9-30쪽.
- 조상식, 2008. 19세기 서구 시민계급의 교육문화 형성과정 : 가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권 2호, 237-256.
- 최신일(2008). 인간, 인격 그리고 인격교육.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27, 185-206쪽.
- 최형익 (2000). 독일 노사관계의 구조화 동향 :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89(41), 91-107쪽.
- 추병완(1995). 미국의 도덕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 158-202쪽.
- 허경철, 조난심, 김양분, 유균상, 이성호(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CR94-01*.
- Baden-Württemberg(2007). *Grundgesetz Landesverfassung*. Landtag von Baden-Württemberg.
- Berlin(2004a).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Katastrophenschutzgesetz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60. Jahrgang Nr. 4(www.berlin.de).
- Berlin(2004b). *Rahmenlehrplan Grundschule: Mathematik*, Wissenschaft und Technik Verlag(www.berlin.de).
-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OECD.



World Education



열린 교육, 아이폰에서 노벨상까지 일본 츠쿠바대학교

클
•
윤샘이나
서울신문 기자

I. 거대한 연구도시 츠쿠바를 가다

일본 도쿄의 거대한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아키하바라에서 TX(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타고 한 시간여 달리면 조용한 연구도시 츠쿠바에 도착한다. 검소한 기차역을 벗어나면 보이는 한적한 마을 풍경에 언뜻 수도 근교의 조용한 위성도시로 보이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 도시가 움직이는 거대한 소리가 들린다.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이 곳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도시 중 한 곳이다.



가장 조용하면서도 바쁜 이 도시의 중심에 도시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국립 츠크바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도쿄에서 약 60km 떨어진 이바라키현 츠크바시에 위치한 이 대학에는 정문도, 울타리도 없다. 일본의 다른 대학이 일과시간이 끝난 후 대개 정문을 닫는 것과 달리 츠크바대학은 개교 때부터 캠퍼스의 출입문을 만들지 않았다. 언제나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다. 우거진 숲 사이에 띄엄띄엄 세워진 대학건물과 각종 연구시설들은 약 2,700만㎡(약 816만 평)의 광활한 캠퍼스 위에 경계를 짓지 않고 어우러져 하나의 연구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1973년 개교 당시 '제2의 도쿄대'를 목표로 출발한 츠크바대학은 현재 이공계와 의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일본 제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잡았다. 대학과 연구소, 민간기업이 한데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연구와 실습, 실용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츠크바시가 일본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과 연구진의 끊임없는 연구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 그리고 머지않아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구와 실용이 공존하는 이곳의 원동력은 열린 교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II. 츠크바대학의 열린 교육, 학군과 학류 제도

실제 츠크바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3명 배출한 세계적인 학문의 산실이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자율적인 연구와 열린 교육을 강조하는 이 대학은 교토대 출신으로 츠크바대학 교수가 된 도모나가 신이치로 명예교수의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시작으로 1973년 에사키 레오나 명예교수의 노벨 물리학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의 노벨화학상까지 역대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대학의 노조무 가와가쓰 교수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환경이 큰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노





World Education



벨상 수상자와 같은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와가쓰 교수는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에게엔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똑같은 것만 주입한 과거의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열린 교육과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연구를 강조하는 츠쿠바·대학의 학풍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이 대학이 공계열 학군에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열린 대학에 의한 선도적 연구자 자질 형성 프로그램’이다. 이공학군·정보공학군·생명환경학군 등 3개 학군(學群)에서 지원한 500여명의 학생 중 17명을 선발해 각자 지도교수와 연구실을 제공하고 1~3학년에 걸쳐 관심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구 주제와 방법, 기간 등 연구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설계해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연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연구 과정을 발표하는 것. 결과를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츠쿠바대학이 생각하는 ‘선도적 연구자 자질’이란 광범위한 학문분야 가운데 자신이 관심있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고 연구방향 설정부터 과정,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생명환경학군 생물학류 3학년 이토(21)씨는 “수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중일 내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더 바쁘다.”고 말했다. 1년에 56만 3000엔(약 778만원)을 지원받는 이토는 ‘복합체기능 미지 단백질의 기능 및 상호작용 해석’이라는 연구를 2년째 진행해 학부생 자격으로 이례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냈다.

이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인 시라카와 유키 교수는 “공부가 이미 옳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연구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지금 틀을 깨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다양한 학문 사이를 오가는 진정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츠쿠바대학의 열린 교육 풍토는 이 대학의 독특한 학과제도에서도 엿보인다. 츠쿠바대학은 일본의 다른 대학에서 운





영하는 학부제보다 넓은 개념의 학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학군·사회국제학군 등 학문을 폭넓게 분류해 다양한 수업의 선택과 통합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은 같은 학군 안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학군에 속한 수업으로 시간표를 채울 수도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개발하고 구성해 학점을 신청하는 ‘학점 취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대부분 자기 전공의 수업으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따라야 하는 다른 대학과는 다른 점이다. 이 대학의 야마다 데쓰야 홍보실장은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선택하는 행위를 존중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Ⅲ. 한국의 열린 교육

최근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다양한 열린 교육의 시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움직임은 츠쿠바대학처럼 이공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대학에서 앞장 서 주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1991년 무학과·무학년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입학할 때부터 학과 또는 학부를 정해 공부방향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접한 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은 입학한 뒤 3학기 동안 모두 인문 사회과학부에 소속돼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교양 및 기초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연구 주제와 방법을 스스로 설계한 뒤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전공공부를 시작한다. 현재는

카이스트 외에도 포스텍,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광주과학기술원(DGIST) 등 다수의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무학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대학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대를 비롯한 20여 개 4년제 일반대학들이 2009년부터 자유전공학부와 자율학부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의 무학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학부에서는 학생의 잠재력을 기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학과를 정하지 않은 1~3학기 동안 학생들은 공대와 인문대, 예술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적성과 관심주제를 파악한다.

그러나 열린 교육과 융합교육을 표방하며 도입된 자유전공제도가 국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스펙의 청년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가의 현실에서 진정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따라 전공을 탐색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자유전공학부 도입 4년차를 맞아 지난 2월 첫 배출된 졸업생들을 살펴보면 통섭과 융합인재 육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선택 시 취업에 유리한 경제·경영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World Education

서울대가 2010년 1학기부터 2013학년 1학기까지 7학기 동안 학생들의 누적 전공선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851명의 학생 가운데 경제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전체의 22%인 187명, 경영학과는 17%인 147명이었다. 전체 약 40%의 학생들이 경제·경영학과를 선택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로스쿨이나 각종 고시 준비반으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열린 교육을 향한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창의적 사고와 학문의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에 전공선택의 자유와 다양한 학문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가 도입하고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무학과, 자유전공학을 한 단계 뛰어넘어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츠크바대학의 ‘학점 취득제’와 같은 이 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2개 이상의 학과를 융합해 자신만의 새로운 전공을 만들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모두 40명의 학생이 법사회학, 인지생물심리학, 인문소통학, 시각문화학 등 자신만의 전공을 설계했다.

대학에서 시작된 열린 교육의 움직임은 점차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과학(Science), 기술(Tech-



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딴 ‘STEAM 교육(융합인재교육)’은 최근 일선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교실에서는 이전의 수업시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된다. 학생들은 학의 원리를 말로 풀어내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식 기법, 스테인드글라스 안에 숨어 있는 나노과학 기술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을 넘나들며 사고력을 키운다. 이처럼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특정 주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인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STEAM 교육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국 80개교를 STEAM 리더스쿨로 선정, STEAM 과목을 시범적으로 학교 교육에 적용·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리더스쿨 외에도 150개 교에서 다양한 과목의 교사가 함께 STEAM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교사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IV. 열린 교육의 성과, 아이폰에서 노벨상까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의 동양인 2명이 포함됐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중국의 모옌, 그리고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그 주인공. 후보자 명단에 들지 않아 기대

감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국내 학계는 씩씩한 속내를 감출 수는 없었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철이 되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등 과학분야 노벨상에서 일본은 역대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과학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일본은 지금까지 물리학상 8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2명, 문학상 1명, 평화상 1명 등 총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2000년 이후에만 1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일본은 점차 세계 과학계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

주제와 방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일본의 연구풍토는 2050년까지 30명 이상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공언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츠크바대학 출신 노벨상 수상자들



에사키 레오(江崎玲於奈)
츠크바 대학의 명예교수 겸 초대 학장.

반도체와 초전도체 각각의 터널링 현상에 대한 실험적 발견으로 197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공동수상자)
Dr. L. Giaever(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社)
Dr. B. D. Josephson(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故) 도모나가 신이치로(朝永振一郎)
동경교육대학(츠크바대학의 전신) 명예교수 겸 초대학장.

양자전기역학의 기초 연구, 소립자 물리학의 중대한 이론의 개척으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공동수상자)
Dr. Julian Schwinger(미국 하버드 대학교)
Dr. Richard Feynman(미국 켈텍)



시라가와 히데키(白川英樹)
츠크바 대학의 명예교수

전도성 중합체에 대한 발견과 개발로
2000년 노벨 화학상 수상.
(공동수상자)
Dr. Alan J. Heeger(미국 UC산타 바바라)
Dr. Alan G. MacDiarmid(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Korean Education



애국심과 인류애로 글로벌 리더를 키우다

중국 상하이한국학교

글

•

김윤기

교육부 교육연구사

오천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팝송과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서구문화에 환호하고 추종하던 시대에서 한류로 지칭되는 한민족의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와 아이돌 가수, 한식 등 한국문화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첨병이 된 것이다. 옛

말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던가. 해외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국운에 힘을 보탤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다. 교육도 한때 외국의 교육을 추종하던 시절이 있었다. 전통적 교육은 시대에 뒤쳐진 구습이자 버려야 할 낡은 물건처럼 취급하곤 했다. 맹목적으로 우리 것은 폄하하고 무시



하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OECD 조사 결과 한국교육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 할 때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류와 같은 문화가 정서에 기반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총체적 활동이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에 있어 한국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수준에 올라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대한민국 교육이 해외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 첫 번째로 오천년 역사의 이웃, 중국 상하이한국학교를 찾아간다.



I.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그리고 상하이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인류문화의 한축을 담당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는 고조선이래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진시황, 사마천의 사기, 영웅호걸의 활약상을 다룬 삼국지, 조선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성리학, 만리장성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과 유적, 서적과 사상들이 중국만의 것이라 하기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현재 14억 명이 넘는 세계최대 인구나 광대한 국토는 큰 틀에서는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전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중국집의 자장면은 한식보다 더 우리 입맛에 익숙한 음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 옆에 있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세계 정치무대에서 중국의 위상과 경제적 영향력 등으로 고도성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

처럼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중국에는 중점도시로 4대 직할시가 있다.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텐진(天津)과 함께 상하이(上海)를 말한다.

흔히 수도 베이징이 정치와 역사의 중심이자 북방의 도시라고 한다면, 상하이는 경제중심의 남방도시로 불린다. 상하이 면적은 6,340km²로 서울의 10.5배, 인구는 1,858만 명으로 서울의 1.8배에 달한다. 사실 상하이는 19세기까지 작은 항구에 불과했다. 그러던 상하이가 개항 이후 급속한 국제화와 현대화로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자 주요 수출입항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임시정부 청사가 있고, 지금은 루쉰(魯迅)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의거가 있었던 홍커우(虹口)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 지금도 수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작년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 그리고 최대 투자대상국이었으며, 한·중 교역액은 2,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해외투자의 2분의 1이 넘는 11,700여 건의 투자가 중국에 몰려 있다. 이 중 20% 이상이 상하이로 몰릴 정도로 한국인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Korean Education



상해 임시정부 정신 이어받은 상하이한국학교

전교생 1,010명(2012년 3월 기준. 초 490명, 중 213명, 고 307명)을 둔 상하이한국학교는 해외 한국학교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규모 학교다. 교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광개토태왕비를 연상시키는 교훈석이 가장 먼저 학생들을 맞고 있다. 교훈석에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인이 되자’라는 문구를 새겨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나아갈 곳은 드넓은 세계라는 사실을 학생들 가슴에 심어주고 있다. 1999년 개교한 이래 13주년을 맞는 상하이한국학교는 초등 3개 학급을 시작으로 2002년 중학교과정, 2004년 고등학교과정을 개설하면서 명실공히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갖춘 학교가 되었다. 그 후 2006년에 와서 학교건물을 임대해 사용한 지 7년 만에 지금의 독립건물로 이전해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배경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다. 상하이 교민을 비롯해 상하이총영사관 그리고 상하이에 진출해 있었던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최경연 교감은 말했다.

상하이한국학교가 개교 13주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출발은 1916년 상하이기독교소학교에서 찾아

야 한다고 최고감은 말한다. 1916년 일제 강점기 하에 상하이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우혁, 한진교, 김철 등이 교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여 학생 4명으로 ‘상하이기독교소학교’를 개교하였고, 이듬해 학교명을 인성(仁成)학교로 개명해 교민들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인성학교는 임시정부 산하의 유일한 공립학교로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1935년 일본총영사관의 일본어교육에 불복해 무기한 휴학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폐교하는 가슴 아픈 역사도 안고 있다. 광복과 더불어 1946년 재개교한 인성학교는 1981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부득이 활동을 멈추게 된다. 그 후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라 많은 한국인이 상하이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금의 상하이한국학교가 1999년 공식적으로 인가되었기에 그 뿌리는 191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11월 열리는 학교축제를 ‘인성제’라고 명명하고, 당시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고자 하고 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인성제 외에도 상하이한국학교가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노력은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가 임시정부 유적지 도보 답사다. 작년 4월 9일 상하이한국학교에선 학생 30여 명과 교직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오전





10시 임시정부 청사 참배를 시작으로 신티엔티(新天地), 와이탄(外滩)을 거쳐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장소인 루선공원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답사를 했다. 행사를 실시한 4월 9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서해(9학년, 16세, 여) 학생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은 적은 없었다.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걸었다. 그분들의 고통과 역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사 소감을 밝혔다.



II. 세계일류 학교를 향해

세계는 이제 지구촌화 되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외국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화시대가 성큼 다가옴으로써 외국어 하나쯤은 필수가 되었다. 외국어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와 세계 공용어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한국학교에

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 학년을 4개 등급 7개 반으로 재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1~2학년은 말하기와 듣기에 중점을 두고, 3~6학년은 읽기와 쓰기도 병행하고 있다. 또 학생수준에 맞추어 원어민교사 100% 전담체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한국인 교사와 팀티칭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영어 : 초 1~2는 주당 5시간, 3~6학년은 주당 6시간, 중국어 : 초 1~2 주당 3시간, 3~6년 주당 5시간) 중학생이 되면 훌쩍 커진 아이들의 키 만큼이나 영어수업도 주당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중국어도 5시간을 5개 반으로 분반하여 기본에서부터 고급 중국어, 한어수평고사(HSK)에 대비한 반까지 더욱 학생수준을 세분화하여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현수 교장은 “물고기가 헤엄을 못 친다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상하이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못하면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영어 페스티벌, 영어 작문대회, 영어 토론대회, 영어신문(The SKS Post)제작 그리고 중국어 예술제, 중국어신문 ‘靑萃果’ 제작, 중국어 작



Korean Education



문대회, 한어수평고사(HSK) 대비까지 두 가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게 함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백하(여) 씨는 “아이의 영어실력과 중국어 구사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낀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기초를 학교에서 닦아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하이한국학교는 외국어교육에 강점을 지니면서도 한국어, 역사 등 민족의식고취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 함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백일장’ ‘한글날 기념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 활동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로서 인류애와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 어느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상하이한국학교는 선·후배 간에 부족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학습 멘토단’을 조성하여 가르쳐서 기쁘고 배워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조성하고 있다. 선생님에게 묻기 어려운 부분을 비슷한 또래에서 오는 동질감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학습능률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학습멘토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입을 모은다. 또 학교 급식 시 한꺼번에 물리는 학생들로 인해 생기는 혼란과 학교 내 사소한 문제라도 예방하기 위해 자율봉사단(C.S.V - Community Service Volunteers)

도 운영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단원들은 조를 나누어 등·하교 지도 및 점심시간 질서유지 등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상하이한국학교가 공부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독도교육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상하이한국학교에서도 ‘독도 사진전’과 ‘독도 사랑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의식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독도가 동해의 외로운 작은 섬에서 상하이한국학교 학생들 마음 속에 들어온 순간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해외친구들에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민간외교 역할을 학생들이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과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학생들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생 민간 외교의 장도 필요하다. 이에 상하이한국학교는 2011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상하이의 공상외국어학교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1:1 학생 교류를 시작하였다. 처음 서먹서먹한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로 변했다. 특히 작년 한글날에 한국학생들과 함께 드라마 ‘여인의 향기’를 더빙하여 무대에 올리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변했다.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파하게 된 것이다. 교류 인원도 2011년도에 15명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22명의 학생으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 운영도 현지인들이 부러워하는 교육방식이다.

옛 말에 일 년을 생각한다면 곡식을 심고, 십년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고, 백년을 생각한다면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다. 또 곡식은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고, 나무는 하나를 심어 열을 얻지만 교육은 하나를 투자하면 백(百)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일등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의 최선봉에 상하이가 있고, 그 상하이 중심에 상하이한국학교가 있다.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상하이한국학교를 주목하는 이유다. 

Ⅲ. 상하이한국학교, 미래도시 상하이의 중심에 서다

지금 상하이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미래도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과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디자인도시 상하이. 세계경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인재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 2011년엔 OECD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세계 1위를 거머 쥐면서 명실 공히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을 통해 미래중국의 앞날을 밝히려는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금도 상하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처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상하이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상하이한국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소개뿐만 아니라, 교육상담과 식단까지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세세한 사항까지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개인의 소질을 살리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두레학습 프로그램 등 방과후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에게 듣다' 집담회 전경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방향과 실행방안

글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실장

I. 자유학기제의 도입 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유학기제가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비전 또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꿈과 끼를 살려 주는 행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대선 공약집에 자유학기제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던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한다는 표현이 빠

진 것으로, 진로탐색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직업체험 활동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면서 불필요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교육 관련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첫 번째 추진전략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산하의 국정과제인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의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창의교육’을 지향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활동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적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인성, 사회성, 창의적 사고력 형성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II.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수업 운영 모델 참고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의 목적 또한 시험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중심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의 전인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환학년제에서 권장하는 수업 운영 모델은 필수교과(아일랜드어, 수학, 체육, 컴퓨터 등), 선택교과(외국어, 사회+정치학, 미디어교육, 미술 감상, 물리, 직업상담 등), 전환학년제 특별모듈(교과와 연계하며, 미니컴퍼니, 사회혁신가, 관광 등), 외부 자유활동(직업체험, 외부 특강, 외부 봉사활동, 여행, 드라마 제작 등)의 네 영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전환학년제의 시간표를 보면 외형상 정규학년의 시간

표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규 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즉, 외국어는 해당 국가 학교와의 교류 및 해당 국가 여행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일랜드어는 댄스 등의 활동을 통한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전환학년제를 맡는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와 운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교과 공부는 안하고 진로체험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학력 저하 또는 사교육 증가를 우려하지 않도록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III.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필요

자유학기제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최상덕)’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는 3개월(2013년 1월~3월)에 걸친 단기간 집중 연구로 자유학기제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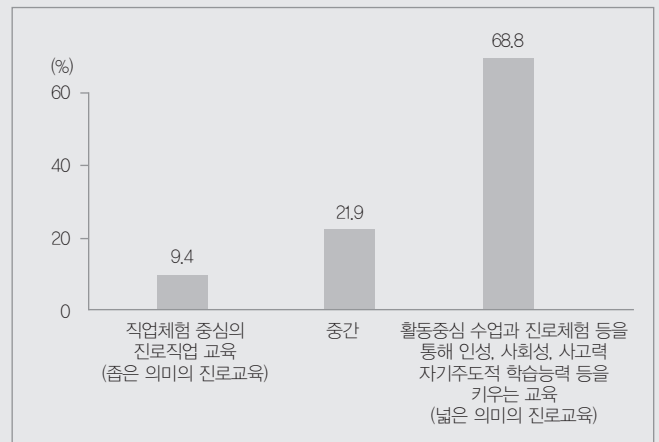


터뷰 참가자 대상의 설문조사, 자유학기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례조사, 학교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제안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의 잠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는 교육전문가 5명, 교사 11명(일반 5명, 진로진학상담교사 6명의 두 그룹), 교장 5명(교장 4명, 장학관 1명), 교육(학부모)단체 대표 5명, 중학생 6명 총 32명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하였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직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학생 30명을 추가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확대한 방식의 집담회를 개최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분석 중이므로 이 글에서는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를 문항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먼저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협의의 진로교육),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

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광의의 진로교육), 그 중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8%가 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광의와 협의의 중간 정도가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1.9%였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선호도

이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 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보다는 폭 넓은 활동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의 실시 학기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진로교육과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구분해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여섯 학기 중에서 적합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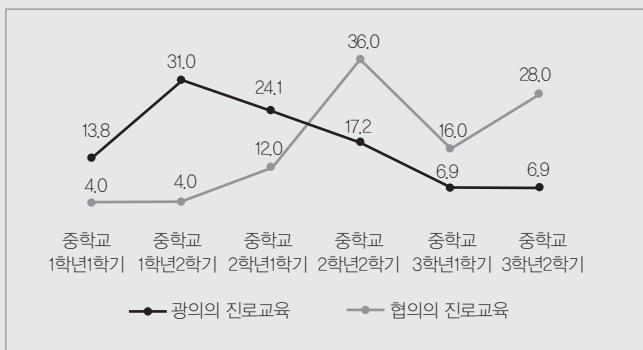


1) 이 분석 결과는 KEDI 교육정책포럼 '자유학기제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내용과 한국정책학회·경사연 공동 세미나 발표논문 '새 정부 교육정책과제의 진단과 실행 방향'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임.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는 '1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1.0%로 가장 높은 반면에 협의의 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실행할 경우는 '2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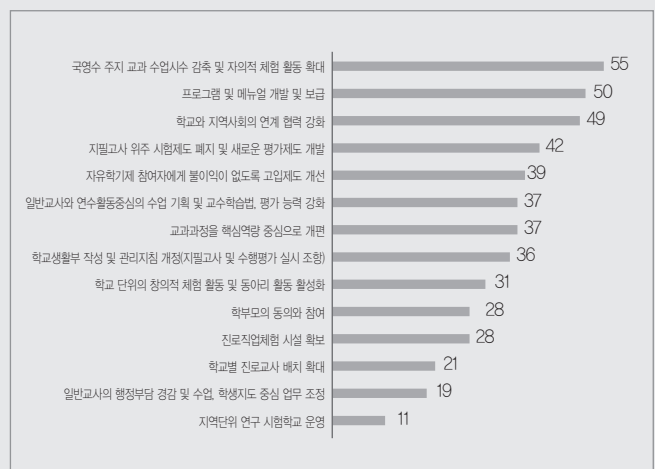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실시 학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기간이 주로 1~3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학생에 따라 직업체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림2] 자유학기제의 실시 시기 선호도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자유학기제 때 모두가 직업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보다는 본인이 중학교 동안 원하는 학기를 정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직업체험 시기가 분산되므로 체험시설의 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동시에 과제들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 1순위는 5점, 2순위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그리고 5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그 결과,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강화', '지필고사 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알기 쉽게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3] 자유학기제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선호도

그리고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단기부터 장기까지 시기별 과제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 결과²⁾. 단기 과제가 다수(9개)를 차지하였다. 단기 과제 중에서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생활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일반교사의 연구·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학부모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지역단위 연구 시범학교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한 단기 과제 선호도

	세부 항목	시기별 과제 구분		
		단기 (1~2년)	중기 (3~4년)	장기 (5년~)
단기 (복수 응답)	1.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1		
	2. 학교생활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 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법·제도 개정)	16		
	3. 일반교사의 연구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강화능력	15		
	4. 학부모의 동의와 참여	15		
	5. 지역단위 연구 시범학교 운영	15		
	6.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13		
	7.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12		
	8. 지필고사 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11		
	9.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 업무 조정	10		

또한 중기 과제는 4개로 응답되었고, 그 중에서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적성 및 수행능력 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교와 지역사회

회의 연계 협력 강화’, ‘진로 직업 체험 시설 확보’,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과제로는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이 선택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앞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된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강화’,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적성 및 수행능력 반영)’이 중기 과제로 선택된 데는 이들이 중요함에도 개선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될 연구 또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우선순위 과제와 단기 과제부터 적극 검토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학생,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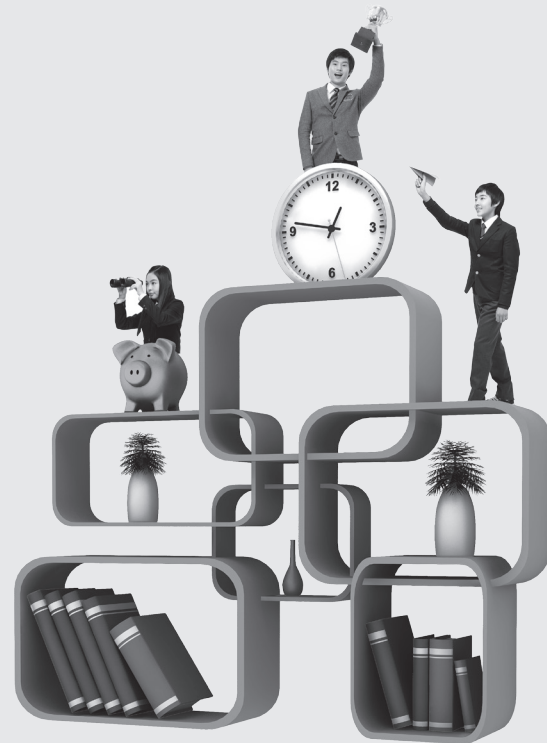


IV.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필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해 앞에 언급한 과제들이 잘 연계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는 활동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수업연구는 물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청소년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미리부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동시에 교사연수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난도 및 분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관련 훈령을 개정하며 진학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자유학기제 실행의 중심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논의단계에서부터 추진 및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자유학기제 실행 학년의 경우 자원하는 선생님들을 우선 배치해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하는 대신에 행정부담 경감 정책과 연계해 수업연구와 학생지도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㉔

참고문헌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최상덕(2013a). 새 정부 교육공약 :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제5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2013b). '새 정부 교육정책과제의 진단과 실행 방향'. 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발표논문(2013. 3. 13.)





2013년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쟁점 및 법안처리 전망

글

이원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분야 수석전문위원

I. 들어가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예전과 달리 취임 전 정부 조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에 상당기간 협의가 진행된 끝에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인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낙장 타결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임 첫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건 취임 첫해에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야당은 물론 언론 등과 새 대통령 간에 국정 성공을 위하여 일단 믿고 돕는 소위 밀월기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마치 선거과정 중에 있듯이 끝없이 정치 협상이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는 아예 밀월시기가 없는 듯 한 분위기에서 출범하였다. 어렵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

는 순조로운 국정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13년에 추진될 주요 과제 및 현안의 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II.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교육철학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고와 행동의 준칙은 원칙과 신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임시방편 식 눈가림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바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과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장단기 방안을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효율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살펴보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민행복이 대통령과 새 정부 제1의 국정 비전 내지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국정에 있어서 방향과 원칙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으로서 가히 새 시대를 표방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철학 또한 이러한 일관된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공약을 수립,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분야별 추진단 가운데 교육만이 ‘행복교육추진단’¹⁾이라고 명칭을 붙여 유독 행복을 강조하였다. 교육이야말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장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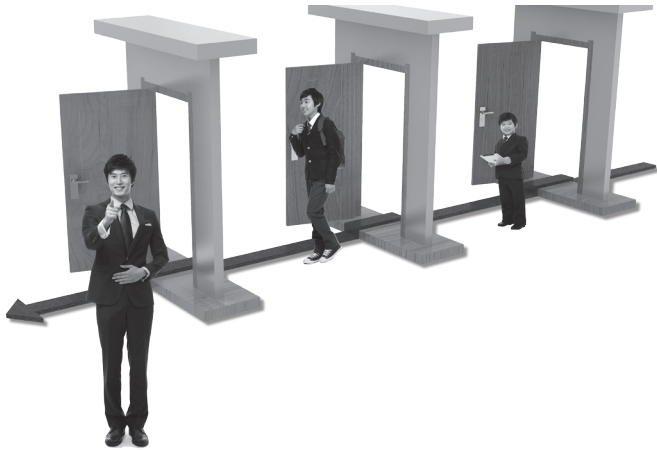
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에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꿈과 끼, 행복교육이란 용어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는 1968년 12월 5일 발표된 국민 교육 현장에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에서부터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의 여러줄 세우기 정책,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등도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곧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국정중심을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두는 맥락에서 행복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다른 어느 정부의 교육정책보다도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꿈과 끼는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관심과 소질을 최대한 발굴하고 꽃피우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곧 우리 교육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학생에게 모으는, 곧 학생중심주의 내지는 학생제일주의 교육을 의미



1) 행복한일자리추진단, 행복한여성추진단이 있었지만 행복한국교육추진단이 아닌 행복교육추진단이라고 명사로서 사용한 추진단은 교육추진단 뿐임.



한다. 공급자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교육(95. 5.31 교육개혁)→학생중심교육(박근혜 정부)으로의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이후 18년 만에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정책적 검토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 이의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인수위를 통해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명확히 한 국정과제를 100% 실천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개혁안의 발굴과 추진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박근혜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선 공약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그 중에서 교육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추진전략(전략 11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략 12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집중적으

로 들어가 있으며 총 11개 국정과제로 정리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 타분야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박근혜 정부 교육 국정과제

국정 추진전략	국정과제	세부 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학교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전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 GDP 1% 수준 확대 추가 확보예산은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질 관리 강화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 제공하도록 일반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교원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 조정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학위 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운영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GHG(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 설치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무상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교육비 경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교육서비스 운영 내실화 · 한국형 공동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등록금을 기초-8분위까지 전액-25%까지 지원 -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든든학자금 전면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 사립유치원 교사의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위험 제로학교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 CCTV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와 연계 통합 관제 강화 · 전문상담교사 등 배치 확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촉진	지방대학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점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개선을 통한 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 -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평가 방식 도입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타 추진 전략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교원확보를 제고, 전공과 학급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사업 대학 의무운영 추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서민 금융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 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스포츠강사 법제화('13)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10개월-1년), 보수 현실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IV. 2013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쟁점 및 법안 처리 전망

교육은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아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 방안, 즉 각론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방향이거나 의견 격차가 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정책 실현은 입법에 의한 실현과 비입법적 실현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입법적 실현은 순전히 국회의 몫이다. 비입법적 실현은 정부의 몫이나 상임위 국정보고 및 질의를 통한 국회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입간 소화와 3년 예고제, 교원평가 개선,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 지원 확대, 사교육 문제 등이 관심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 외에는 최근 충남교육감 사태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 15만 여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률안의 제·개정, 시행령의 제·개정, 행·재정적 수단 등을 통해 추진될 것이나 우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교육 금지 등을 포함할 ‘(가칭)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저항이라든지 지방대학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상호 정책적 충돌이나 갈등이 예견된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행교육의 범위와 적용 대상 등에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되면서 유치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의 상승 등으로 연초부터 정부 여당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원의 문제와 유아교육 관련기관의 비용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전체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신중히 검토 중인 합리적 법안이 발의 되면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조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은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완전공영선거제, 시장·도지사 임명제, 교원 및 학부모에 의한 간선직 직선제 등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어떻게 결말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 및 입법 사항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협력과 타협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법 사안은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2012년 5월 30일 개정된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1)천재지변의 경우, 2)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 외에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예전 같은 직권상정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충돌할 만한 교육문제는 없을 것 같다.



더욱 다행한 것은 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에 비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어 18대 때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어나 모범 상임위가 되고 있다. 마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과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들의 구성도 다소 달라질 것이다.

V.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교육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고 또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 교과위는 무리없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소관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 조만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칭되고 다소 재구성될 것이지만 2012년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인 학생 행복, 학생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된다. 흔히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큰 전기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정책모형과 성과, 과제



글
•

이영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I. 머리말

최근 대학의 구조개혁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이란 말 대신에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대학의 경우 단순한 다운사이징(down sizing)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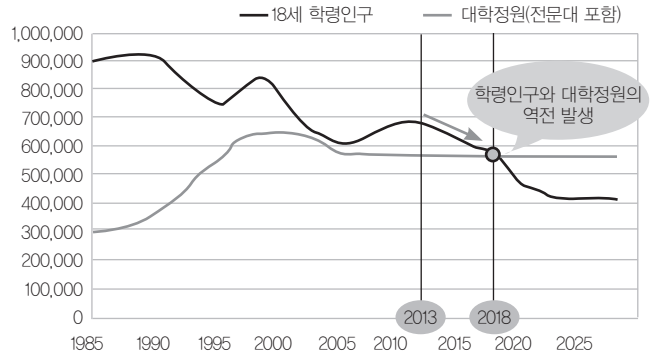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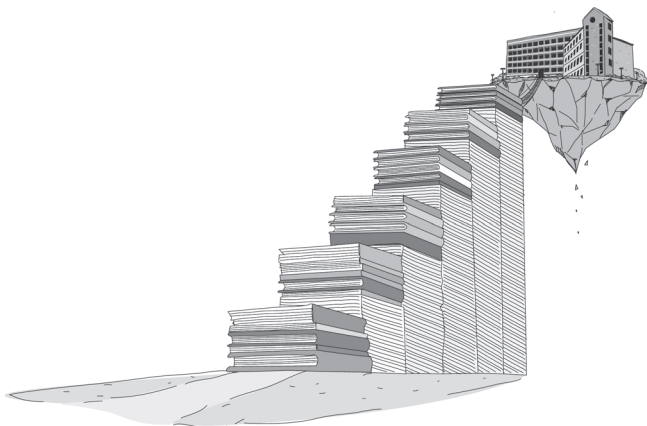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은 대학교육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계발과 활용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학경쟁력이 그다지 높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그보다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이 질적 발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고양할 수 없으리란 점에서 한국 대학의 질적 성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대학의 질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학은 너무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규모를 줄임(다운 사이징)과 동시에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II.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몇 가지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는 정보통신의 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변화이고 둘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첫 번째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변화는 대학의 양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양적 변화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을 논하기로 하자.



[그림1] 학령인구의 감소

※ 자료 :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 /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교과부

[그림1]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우리나라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총 입학정원을 비교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또 저출산 경향이 확대되면서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8년에는 급기야 현재의 대학입학정원보다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적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입학령인구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80%에 근접 하던 것이 최근 70% 중반으로 하락) 실제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대학입학정원보다 더 크게 낮아질 것이다. 또한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대기업이 사내대학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대학졸업생들의 재교육비를 줄이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원을 미리 교육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결과 2018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대학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여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

한국 대학의 정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대학진학률도 높았던 것은 과거에 대학교육을 다소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이며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풍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보다 실용

〈표1〉 대학진학률 추이(등록자 기준)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진학률 (등록자 기준)	62.0%	65.0%	68.8%	72.6%	73.2%	73.4%	74.4%	76.5%	77.0%	77.8%	75.4%	72.5%	71.3%

※ 진학률 = 당해 연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당해연도 고교 졸업자*100
 ※ 자료 :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

적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대학의 졸업장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교육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질적 수준을 갖춘 대학만이 앞으로의 경쟁을 이겨 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학들이 미래의 이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교육 전체가 큰 위기에 당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효율적 구조개혁과 대학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Ⅲ.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모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쟁력이 하위인 대학을 선별해 내

기 위해 〈표2〉와 같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학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재학생충원율과 졸업생취업률을 선정하였다. 충원율은 입학생의 선택의 결과이며 취업률은 그 대학의 졸업생이 얼마나 경쟁력을 지니는가를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각 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표현하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와 교육과정의 적합도, 그리고 대학의 재정적 충실성을 보이는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법인부담지표와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협력역량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의 학교별 상대적 순위를 구한 후 이를 표준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얻은 총점을 마지막 평가지표로 삼았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산정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상대평가의 문제이다. 상대평가를 할 경우 모든 대학이 높은 경쟁력을 지녀도 결국 하위에 놓이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각 지표의 일정한 절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평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러나 그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또 당분간은 각 대학들의 경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몇 년은 상대평가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비판은 가중치에 관한 것이다.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은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따라서 2013년도의 평가에서는 취업률과 충원율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고 대신 교육의 내실을 기



하기 위한 지표들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하였다. <표2>는 새로이 적용될 지표별 가중치의 변화도 보여준다. 이러한 지표들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총점을 구하고, 그 총점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한다.

또 다른 비판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할 경우 지방대학이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평가방법을 일단 전체 대학에 적용한 후 우선 하위 10%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5%는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정 대학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 수가 그 지역 전체 학생수의 30%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로 하였다. 즉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30% 이내로 될 때까지 상위권 학교부터 제한대학에서 해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제된 대학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의 대학이 대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대학으로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절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다시 재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제한을 부과하여 보다 강하게 대학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절대기준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의 대학 전체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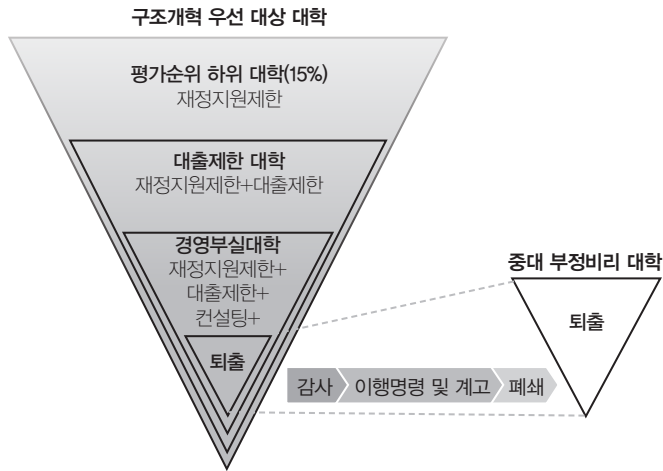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현지실사를 통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대학이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대학을 구분해내어, 이들을 다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한다.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법령의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평가모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깔대기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요약컨대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정부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들 가운데 다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선정하

<표2>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취업률	20%	15%	△5%p	20%	20%	-
재학생 충원율	30%	25%	△5%p	30%	25%	△5%p
전임교원 확보율	7.50%	10%	2.5%p	7.50%	7.50%	-
교육비 환원율	7.50%	12.50%	5%p	7.50%	10%	2.5%p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	12.50%	2.5%p	10%	12.50%	2.5%p
장학금 지급률	10%	10%	-	10%	7.50%	△2.5%p
등록금 부담 완화	10%	10%	-	10%	7.50%	△2.5%p
법인지표	5%	5%	-	5%	5%	-
산학협력 역량지수	-	-	-	5%	5%	-

※ 자료 :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교육부



[그림2] 대학 구조개혁 정책모형

며, 또 그들 중에서 다시 경영부실 대학을 가려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모형은 대학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퇴출을 유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 정책은 국립과 사립을 망라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이 모형이 기준으로 삼는 하위 15%에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개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극히 열악한 경쟁력을 보이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따로 시행하는 바, 특히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과거에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고자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선임된 총장은 정부당국과 성과목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총장의 경영성과를 평가받게 하였다. 그 평가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체제가 대학의 연구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연구가 대학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평가체제는 어떤 대학이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이 높은 대학인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지 아니한다. 오히려 어떤 대학이 대학의 기초적 사명인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평가체제는 연구력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구력은 높으면서 교육지표가 낮게 평가되는 대학이 있다면 이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고서도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대학들은 조속히 대학의 기본 사명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IV.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

위에서 설명한 대학 구조개혁 모형은 이미 두 해에 걸쳐 시행되었다. 매년 40여 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또 매년 10개 내외의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행 제1차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 중 거의 절반



이 이듬해의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각 대학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 결과이다. 그 대학들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감축, 학과의 통폐합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총 5개의 대학이 불법부실 운영 대학으로 폐쇄명령을 받거나 경영난을 근거로 자진 폐교하게 되었다. 또한 총 15,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 결과 뿐 아니라 각 대학의 질적 개선도 의미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지표의 개선은 대학당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강화했음을 의미하고, 또 그런 변화가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한 바대로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없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큰 성과를 거뒀다. 즉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기하게 되었고, 모든 대학의 총장이 정부당국자와 함께 성과목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계약의 실행여부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V. 과제

대학을 구조개혁한다는 일은 몹시 지난한 일이다. 대학에는 여러 계층의 구성원, 즉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연할 경우 개별 대학이 곧 큰 어려움에 닥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각 대학들이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득이 퇴출되어지는 대학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퇴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대학을 폐쇄할 때 잔여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대학의 법인들이 되도록 자산을 국고로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여러 부조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퇴출출구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잔여 자산을 이용해 구성원들의 명예퇴직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학교법인을 사회복지재단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폐쇄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이 시작된지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방법, 혹은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학의 구조개혁은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혁의 속도를 늦춘다면 머지 않아 우리 대학들은 큰 혼란과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폐교 걱정하던 농촌학교 ... 사교육 걱정없는 '행복학교'로

대구 가창초등학교

글

한찬규

서울신문 편집국 메트로부 기자

'행복학교'로 지정 후, 작은 기적 만들며 인기학교로 급부상

'봄이면 이팝나무 꽃 잎이 눈꽃 되어 내려앉는 숲속 교실, 여름이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엄마소의 울음소리가 정겨운 학교 운동장, 가을이면 덧밭의 귀여운 농부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에도 음악 줄넘기로 생기 넘치는 작은 풀이, 이슬 한 방울에도 사랑이 있는 학교'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 보는 학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학교라며 곧 그 생각을 내려 놓는다.

이런 '꿈꾸는 학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학교가 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초등학교다.

가창초등학교는 대구 도심에서 청도군 방향으로 12km 떨어진 농촌학교다. 1933년 개교해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전교생 수가 1,300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릿고개 시절, 주민





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나 둘씩 농촌을 떠나 대구 도심으로 빠져 나가면서 가창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1980년 728명으로 줄더니 5년 뒤인 1985년에는 460명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학생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됐다. 1990년 330명, 1995년 202명이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176명으로 2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5년에는 100명선이 무너졌으며 2009년 76명, 2010년 63명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46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폐교대상 학교 기준인 60명을 밑돌았다.

폐교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을 것으로 보이던 가창초등학교가 지난해 작은 기적을 만들며 인기학교로 급부상했다. 가창초등학교의 현재 학생 수는 141명이다. 지난해 초 46명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것이다. 6학년을 제외하고 전 학년이 정원을 훌쩍 넘었다. 올해 신입생도 몰렸다. 26명이 입학했는데 이 가운데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어린이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명은 통학구역 외 어린이다.

이같이 가창초등학교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자율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자율학교는 초등학교교육법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다. 과목별로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행복학교라고 이름 지었다.

‘사교육 없는 전원학교’ 슬로건 내걸고 외국어 중심학교로 거듭나

행복학교로 지정된 가창초등학교는 ‘사교육 없는 전원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 외국어 중심학교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2012년 시범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발음, 단어, 문법 순으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업시간표를 탄력적으로 운영, 영어, 중국어 등을 특화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은 주당 1~2시간이지만 가창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주당 6~8시간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수업하도록 했다. 정규 교과시간에는 할 수 없는 중국어 수업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주당 2~3시간씩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같은 교과과정 수립이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학생지도에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도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골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까 해서 였다.

하지만 교사들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계획된 교과과정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이면 방과후학교 이야기,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야기,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적





응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교사들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갔다. 시골학교라는 생 각으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 고 교정을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대구의 강남 이라고 불리며 교육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수성구에 사는 학부 모들도 있었다. 입소문이 한사람씩 한사람씩에게 전달되면서 줄지에 명문학교가 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 오전 가창초등학교 어학실에는 2학년 어린이 들이 영어수업에 열중이었다.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알파벳 익히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원어민 교사가 'T' 자를 들었다. 어린이들이 머뭇거리자 원어민 교사가 손가락으 로 자신을 가르켰다. 그러자 "Teacher"라는 소리가 합창처럼 교실에 울려 퍼졌다. 어린이들은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젠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다."면서 "영어시간이 즐겁 고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가창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국내 공립은 물론 사 립초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

또 매일 방과 후,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는 물론이고 한자, 컴퓨터, 바이올린, 단소, 리코더, 태권도, 줄넘기도 배운다. 수 강료는 전액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학교 측이 우수한 강 사를 직접 뽑아 교육의 질도 높다.

매주 '토요문화학교' 열어 문화교육 체험 제공 ... '가창달인제'도

매주 '토요문화학교'에서는 미술, 바이올린, 태권도, 컴퓨터,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도심 학교 못지않은 문화 교육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가창달인제'라는 자체 프로그램

을 통해 한자 등 8가지 종목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가르 친다. 방학 때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사교육이 따 로 필요 없다.

점심시간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1,300여㎡에 이르는 학교 텃 밭에서 직접 재배한 각종 채소를 반찬으로 나눠 먹으며 이야 기 꽃을 피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편식 없는 건강한 식생활 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 3년 동안 중국 텐진의 국제학교 교장을 지낸 뒤 이 학교 교장으로 선발된 이상근 교장은 "행복학교 운영 소식 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학교를 방문 하거나, 전화로 전학 문의를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며 "전 학생 중에는 2, 3학년이 가장 많고 절반 가량은 수성구에서 전 학을 온 경우"라고 말했다.

수성구 가까운 곳에선 시내버스로 10~20분 밖에 걸리지 않 지만 일부 전학생 학부모들 중에는 직접 승용차로 자녀를 통학 시켜야 하는 수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

가창초등학교와 같은 행복학교의 경우, 학년 당 21명까지





통학구역 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9월 이 곳으로 전학 온 3학년 A군은 “처음 교실에 들어서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늘 즐거움과 활기가 넘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학 오는 친구들이 더욱 늘어났다. 기존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학년 아이를 전학한 학부모 김모(36·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여)씨는 “남편이 처음 아이를 전학할 때 굉장히 불안해 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교장은 “학부모들이 진정 목말라하는 것을 학교가 만족시켜준 결과”라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교육 부담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델로 만들고 싶다. 요즘은 너무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꾸준히 지원해 명문학교를 만들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창초 외에 서촌초·유가초도 '행복학교'로 지정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가창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촌초등학교, 유가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했다. 아토피 치유 목적인 서촌초등학교는 올해 40명의 신입생이 몰려 1학년 1개 반을 2개 반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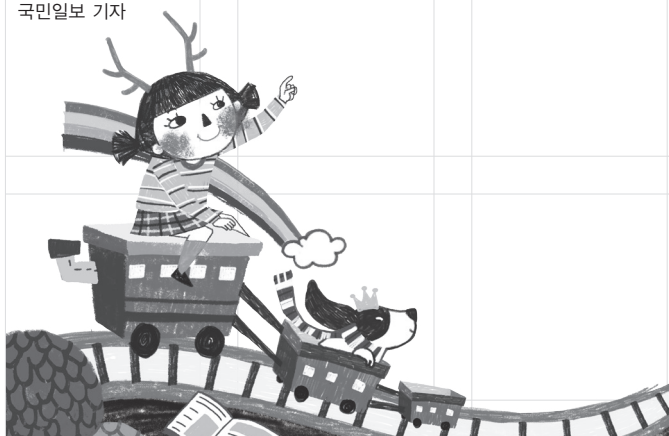
구역 내 의무 취학 어린이는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명은 통학구역 외 어린이이다. 이들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을 앓고 있으며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번에 서촌초의 문을 두드렸다. 서촌초가 편백나무 등 친환경 자재로 교실을 꾸미고 친환경 식단 위주의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한 서촌초는 신입생이 몰리자 1개 반이던 1학년을 2개 반으로 늘렸다. 예술 중심 행복학교인 유가초에도 지난해 7명이 들어 왔으나 이번에는 20명이 입학했다. 전교생이 브라스밴드 일원이 돼 지역축제를 돕고 사물놀이, 영어연극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행복학교에 대한 인기가 치솟자 올해는 중학교를 포함해 모두 1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복학교 예산도 작년까지만 5억원이던 것을 올해는 19억원으로 늘렸다. 학교마다 1억~2억원에서 차등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행복학교는 건강,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해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의 힘! 소통의 장 열리고 성적도 '쑥쑥' 서울 연서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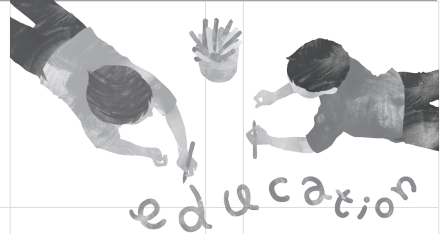
클
•

김수현
국민일보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53명, 차상위계층 64명,
경제적 곤란가정 217명

최근 서울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말해주는 지표들이다. 서울 연서중학교가 위치한 은평구 증산동은 경제적 취약가정은 물론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수의 위기 가정이 분포한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문화소의 지역 중 한 곳. 2011년 교장공모제를 통해 연서중에 부임한 박춘구 교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더러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낮은 연서중이야말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2년간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연서중학교는 서울 거원중·수서중·신암중 등 3곳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2012년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권위 없었더니...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서울 연서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교문 입구에서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는 박춘구(56)교장을 가장 먼저 마주친다. 지난 2011년 박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한 직후부터 시작한 ‘아침마중’ 프로그램 때문이다. ‘아침마중’은 박 교장을 비롯한 생활지도교사들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마중하며 인사를 나누는 프로그램. 박 교장은 “요즘엔 아침조회 등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 교장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까 고민하다 아침마중을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인사 좀 하자”는 박 교장의 인사가 부담스럽고 어색하기만 했던 학생들도 차츰 적응해 이제는 더 적극적이다. 박 교장은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교장 선생님~’이라 부르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된다”며 “지난 뽀뽀로 데이에는 직접 만든 뽀뽀로를 교장실로 가져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소통의 ‘벽’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박 교장의 이런 ‘탈(脫) 권위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학년 학부모 김미영(43·여)씨는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와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며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을 하더라”며 “교장 선생님의 권위주의를 타파한 이런 행동들이 사춘기 아이들에겐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텃밭 가꾸기와 캠프 통해 인성 길러

연서중학교는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학생들은 물론 학교폭력 학생·학습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에도 적극적이다. 그 중 하나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텃밭가꾸기’. “의미 없는 처벌이나 벌점보다는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학교 허광신(58) 생활지도부장이 아이디어를 내 학교 뒤편에 버려진 땅을 일구면서 시작했다. 농사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척박한 땅을 가꾸기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텃밭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친근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무럭무럭 자라는 상추와 치커리, 고추,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도 ‘문제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줬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게 된 학생들은 더 신이





나서 농사를 지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한 학생은 자신이 직접 심은 상추를 따서 할머니께 갖다 드리기도 했다.

학교폭력 때문에 얼떨결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송모(15)군은 “예전에는 사고도 많이 치고 학교도 오기 싫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다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에 빨리 오고 싶어진다”며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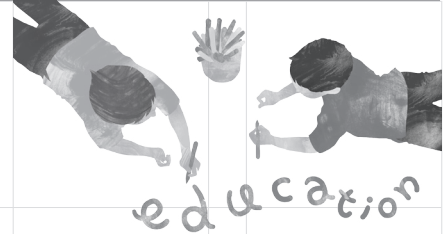
허 교사는 “함께 허리 굽히고 땀 흘리는 동안 학생들 스스로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무언가를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되더라”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학생들 모두 폭력성이 없어지고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허 교사는 이어 “텃밭 가꾸는 일이 재밌어 보였는지 나중에는 반장 학생들도 와서 자신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의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섞여서 어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벌써 직접 지은 상추를 따다가 두 차례나 삼겹살 파티도 열었다.

겨울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1월엔 박 교장을 비롯한 교사 10명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17명을 데리고 강화도에 캠프도 다녀왔다. 평소 지각을 일삼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던 부적응 학생들과 유대감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캠프에서는 장기자랑과 퀴즈대회, 산행 등의 활동들이 이뤄졌다. 캠프를 다녀온 안창원(51) 교무부장은 “부적응 학생들 중 대부분은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크다”며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봄으로써 향후 학교생활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업성적도 경쟁 뛰어... “인성이 답이다”

연서중학교는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전교생 중 30%에 이를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 대부분이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정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모두 체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서중학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유독 ‘체험’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는 편부·이혼 가정의 학생 40명과 그 아버지를 학교로 초청해 지난해부터 ‘아버지 학교’를 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녀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해해보는 ‘공감의 장(場)’을 마련한 것. 회사원·판사·사진작가·소설가·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 학교 학부모들 역시 재능기부를 통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 ‘또 다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학년 이모(15)군은 “난생 처음으로 늘 바쁘기만 했던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원망이 누그러졌다”며 “아버지 역시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다”고 전했다.



매일 아침 조회시간 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는 ‘아침 10분 좋은 글 읽기 프로젝트’ 역시 사춘기 학생들의 인성을 가다듬는 연서중의 체험활동 중 하나. 의미 없이 흘러보내기 쉬운 아침 조회시간 15분을 활용해 이 학교 국어교사들이 엄선한 좋은 시나 글귀 등을 읽고 생각을 나누다보니, ‘질풍노도’이기만 했던 연서중 학생들의 정서가 어느새 한층 성숙해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평가다.

도덕시간에는 이야기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스토리텔링 기반 ‘학급규칙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도 실시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기·학급환경 깨끗이 하기·기본 생활규칙 잘 지키기·학급 물품 관리하기 등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지켜야할 규칙과 이에 따른 벌칙까지 만들어본 결과, 학생들의 준법정신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박 교장은 “학생들이 집에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해결과정에서 창의력도 생기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저변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서중은 인성교육을 위한 TF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팀장인 교감을 비롯해 교무부장·연구부장·생활지도부장·진로상담부장·교육복지부장 등 각 분야 교사 13명이 인성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고안에 힘쓰고 있다. 안 교무부장은 “인성교육은 결코 이벤트 위주로 가면 안 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서중 학생들이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아침 10분 좋은 글 읽기

프로젝트’의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거나, 국어시간에 하는 ‘5분 매일 시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두 TF팀이다. 연서중은 앞으로 이 TF팀을 ‘인성교육 연구회’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인성교육에 힘쓴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몰라보게 향상됐다. 지난 5년간의 국어·영어·수학 등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기초학력 미달자는 줄어 들고, 우수학력 학생들은 늘어난 것이다. 안 교무부장은 “지난해 국어과목의 경우 2008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는 약 11%p(12.0%→0.87%) 감소, 우수학력 학생들은 약 15%p(9.4%→24.02%) 증가했다”며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 역시 “학교에 재미를 느끼고, 학교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이게 바로 인성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





전인적 교육으로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
취업률 12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글

•
위성욱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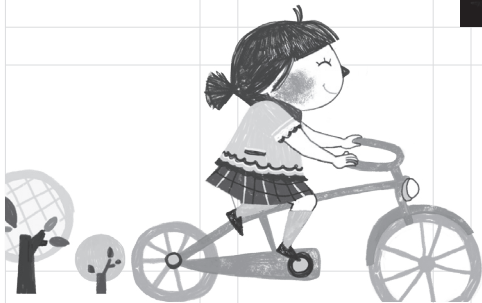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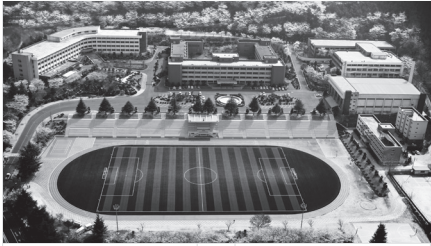
푸른 인성교육 · 탄탄한 교육과정 ·
튼튼한 산학협력 ...

2010년 문을 연 동아마이스터고(교장 위성욱)가 산학 협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마이스터고의 첫 결실을 풍성하게 이루어내었다.

동아마이스터고는 전자와 기계 산업 분야의 글로벌 영 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탄탄한 교육과정과 막강한 전문교원, 튼튼한 산학협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신입생은 중학교 내신 평균 상위 25.5% 학생들로, 대전 75개 중학교 중 52개 중학교, 전국 51개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했다. 신입생의 70%가 대전의 중학생들이며, 타 시·도(51곳)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3개 중학교에서 동아마이스터고에





입학한 것이다. 평균 연령 44.8세인 교원의 52%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풍부한 교육경험과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산학협력을 향한 이 학교의 열정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동아마이스터고의 성공 이면에는 다양한 특색사업이 있다.

문도 협의하고, 학부모와의 산학관계 홍보 및 학생 취업 진로 상담, 자기소개(PT), 면접, 사내예절 등 케어 시스템 등도 이뤄진다.

2학년 과정부터 13개의 주문식 교육반에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졸업자 모두 우수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한 상태다.

주문식 교육반 운영 및 전국 고교 최초 취업지원센터 운영

산업체 수요에 대한 맞춤형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과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수요자인 산업체로부터 교육 내용과 인력을 주문받아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는 인재를 유치해 양성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최신 지식과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장학금 혜택을 통한 학비 걱정 해소, 취업 불안 해소 등을 얻을 수 있다. 산업체는 재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인력과 교육 내용을 주문할 수 있어 인재의 현장 투입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교로 접수되는 모든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교내 취업지원행사 및 프로그램 취업가이드를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 기업 간 구인 구직 및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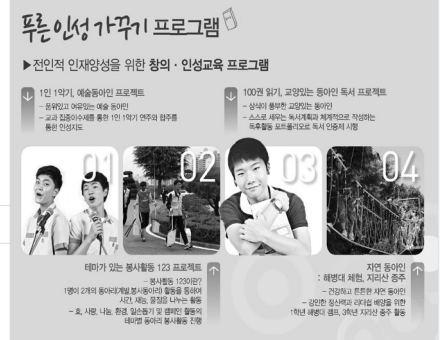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4개 과 전공분야별로 개인이나 집단 상담 방식이다. 외부 협력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취업의뢰 방

마이스터고 유일의 육군본부 군 특성화학교 운영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군의 첨단 기술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 전문병 및 전문하사로 근무(3년), 장기선발 시

〈표1〉 2012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현황 (2013. 2. 2 기준)

회사명	인원	회사명	인원	회사명	인원
삼성전자	24	동부라이텍	4	이엘케이(ELK)	2
삼성디스플레이	17	연구장비 E/G	2	GMIT	2
LS산전	4	한국수력원자력(주)	3	SIT	1
서울반도체(주)	5	한국전력공사 (KEPCO)	5	넥스젠테크놀로지	2
세메스(주)	5	(주)둔포기계	5	(주)대부	2
STS반도체통신(주) (보광그룹)	1	(주)원익PS	3	이노TIA	4
한국중부발전(주)	1	(주)TOPTec	3	이삭엔지니어링	1
한전원자력연료(주)	3	한국알박(주) (일본기업 한국법인)	2	(주)씨누코	2
OC(주)	1	동부LED	3	시스게이트	2
CJ제일제당	3	히로세코리아 (일본기업 한국법인)	7	제이티(JT)	4
한국조폐공사	1	제일시설공업(주) (일본기업 한국법인)	7	거성인더스트리(주)	1
BK LCD(보광그룹)	5	필룩스	2	석원	1
POSCO	1	엠투엠 코리아	4	신영창호	1
글로벌텍	1	힘스인터내셔널	2	국방부군특성화반	35
졸업생(184명) 100% 취업					



정년 보장(55세), 전역 후 직업군인 또는 관련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자과와 기계과로, 군 특성화학과 선발 확정 시 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현장견학 및 수련활동을 전액 무상지원한다. 품위유지를 위한 제복 등을 주고 졸업과 동시 전문병으로 입대하며 입대 6개월 후 장려수당 300만원을 선지급한다. 전문하사 임관 후 장려수당(60만원) 포함 월 급여 210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장교로 진출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이론과 실무를 갖춘 글로벌 기술 전문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일의 인재교류, 기술교류 등을 통해 국외 인턴십, 취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학년 전원이 참가한다. 연수장소는 일본 규슈(九州)와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으로 하며, 전자과와 LED 조명과는 일본, 기계과와 자동화 시스템과는 중국으로 한다. 국외직업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와 문화체험 및 외국문화를 배우고, 마이스터고의 우수성을 홍보해 실질적인 기술·학술 교류를 통해 해외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지리산 종주와 해병대 체험

지리산 종주는 3학년 과정이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5.5km의 주능선을 오른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활처럼 굽은 25.5km의 주능선은 노고단, 반야봉, 토끼봉, 칠선봉, 촛대봉, 천왕봉 등 1,500m 이상의 봉우리만 16개나 이어지는


등산로다. 종주 산행 중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내력을 기울 수 있다.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목표를 향한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며, 동아마이스터고만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병대 체험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사회에서는 실력만 우수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아마이스터고에서는 '푸른 인성 가꾸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 인성 가꾸기 프로그램'은 네 가지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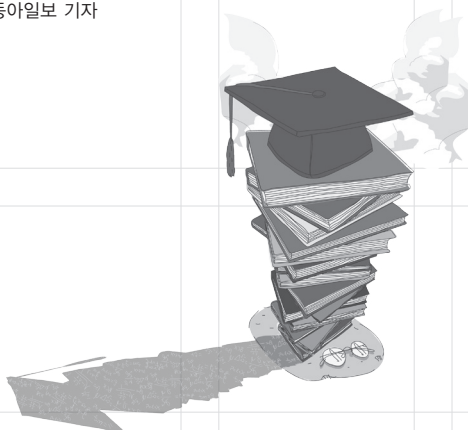
동아마이스터고는 지난해 '대한민국 좋은 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방과후학교 Top-School 우수학교'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일깨우는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발한 발상과 독특한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진정한 프로, 세계와 통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것”을 목표로 오늘도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1년은 현장서 실습 ... 선진국형 4+1학년제 국내 첫 도입 한양대학교 경기 안산 에리카(ERICA) 캠퍼스

글
•
김희균
동아일보 기자



대학의 일반적인 학제는 4년 과정이지만 요즘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드물다. 연수나 취업 준비를 이유로 5년, 6년 씩 대학에 머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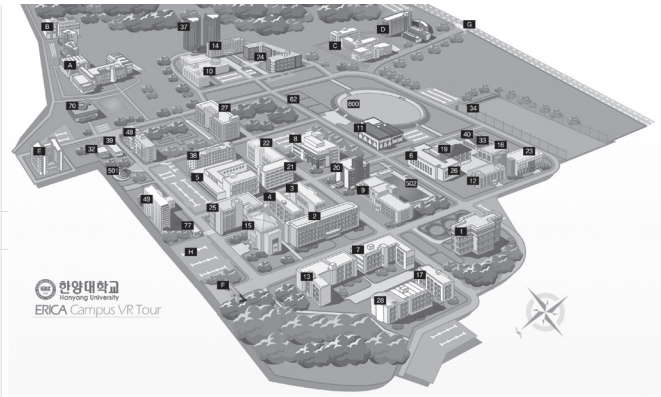
청년실업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학가의 풍토는 이처럼 바뀌었지만 대학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에게 도서관이나 취업지원실을 개방하는 학교는 그나마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대학을 5년 과정으로 설계한 학교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가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의 5년제 대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2013학년도부터 특이한 학사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선택적 5년제' 프로그램이다. '4+1'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른다. 국내 최초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대학을 5년간 다니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학제를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지만, 이미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1년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인프라를 보장해 맨파워를 끌어 올리는 시스템이다. 대학생들이 아무리 토익, 토플,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쏟아 부어도 취업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재교육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불평을 한다.

하지만 대학이 현장 친화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와 산업계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들만 허송세월을 하는 셈이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런 현실에 착안했다. 대학의 이론중심 교육과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이 동떨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선택적 5년제다.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적 5년제 도입을 주도한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대학의 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길러진 인재를 쓰기만 하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 · 무임 승차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생한 현장학습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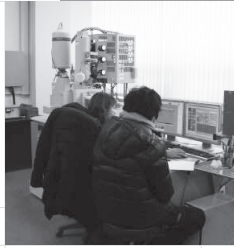


- | | | | | |
|---------------|----------------|---------------|----------------|----------------|
| 1 본관 | 11 체육관(생활체육센터) | 22 계승학관 | 33 음악관 | 44 Lion's Lake |
| 2 대다목적극장 | 12 디자인공간 | 23 디자인극장 | 34 계승학관 | 45 대원동당 |
| 3 제1학술관 | 13 강당 | 24 인화3관 | 35 유진원기술훈공예연구소 | 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4 생활영어교육관 | 14 안방관 | 25 계승기술훈공예연구소 | 36 중앙관 | 47 한국안경연구소 |
| 5 제2학관 | 15 안방스퀘어 | 26 건축디자인관 | 37 학원신물레사자점점대 | 4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6 계승학관 | 16 디자인문화관 | 27 창업보육센터 | 38 계승트윈투스 | 49 경기테크노파크 |
| 7 국제문화관 | 17 사립교육연구소 | 28 인문정보관 | 39 테니스장 | 50 LG화학부품소재연구소 |
| 8 ERICA 학생지원관 | 18 최정호연구소 | 29 보건기술훈공예연구소 | 40 사립신물레연구소 | 51 정문 |
| 9 학생복지관 | 19 학생회관 | 30 수석실습관 | 41 버스승강장 및 휴게실 | 52 서문 |
| 10 인화관 | 20 계승학관 | 31 휴게실 | 42 노천극장 | 53 후문 |

5학기 이상 이수하면 현장으로

올해 1학기부터 에리카 캠퍼스는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희망자에게는 1년 동안 현장실습을 하도록 뒷받침한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재학생도 원한다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범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에리카 캠퍼스가 지원하는 현장실습은 평범한 인턴십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학생들이 각자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해 몇 주 정도 맛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에리카 캠퍼스가 발로 뛰어 찾아낸 우량 기업에서 1년 동안 정규 직원과 똑같이 일하며 진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된다. 원칙은 1년이지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다면 6개월만 도전할 수도 있다.

에리카 캠퍼스는 기업 섭외부터 입사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학생들을 돕는다. 학교가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분야 기업의 정보 및 구인 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이 사이트만 보면 기업의 현황, 급여와 복지 수준, 원하는 인재상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지원서도 학교가 관리한다. 학교가 정한 형식에 맞춰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등을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어느 기업에 지원하든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등록금까지 버는 추가 1년의 기회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간에 기업은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학교에 평가서를 주기도 한다. 학교도 수시로 학생의 근무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는 1년 정도 지나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10학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1년 동안 등록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월 100만~150만 원 정도, 1년 동안 모으면 2개 학기 등록금과 연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선택형 5년제 과정을 설계한 김우승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장은 “1년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 4학년 학비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사실상 3년 치 등록금으로 대학 5년을 마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된 대학이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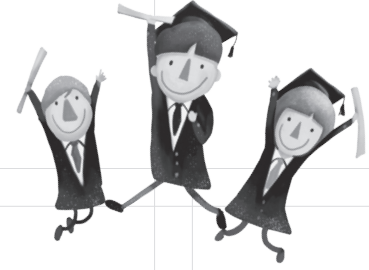
에리카 캠퍼스가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10년 전부터 구축해온 인프라 덕분이었다. 아무리 대학이 학생들을 현장에 내보내고 싶어도 이를 받아주는 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산학협력중심대학인 에리카 캠퍼스는 2004년 LINC 사업 전담직원을 가동해 인근 기업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해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대학들은 계약직으로 뽑는 LINC 직원을 정직원으로 3명 채용한 것부터 남달랐다. 이들은 쓸 만한 기업을 찾아 다니며 “뛰어난 학생을 골라 보낼 테니 방학 동안 믿고 써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기업들은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기업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소개받은 학생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었다.

김우승 단장은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위해 에리카 캠퍼스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에리카 캠퍼스가 10년 간 쌓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혁신, 중소기업도 살리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초창기에 시행한 방학 중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2004년 39개 기업에서 139명이 참여했던 것이



2012년에는 250개 기업에서 860명이 참여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국책 연구소, 대기업, 내실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전공과 장래 희망에 딱 맞는 기업을 골라 실무형 훈련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기업들은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잠시 왔다 떠나는 인턴과 달리 1년 동안 제대로 일할 인력이 온다는 데 마다할 기업이 없다. 특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예상치 못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중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의 재발견이다. 한양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실습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막연히 대기업만 선호하던 학생들이 먼저 참여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알짜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코업’ 못지 않은 성공 기대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의 코업 못지 않은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코업(Co-operative Education)이란 학업과 전공 관련 실제 산업현장의 업무경험을 통합시킨 교육모델. 1906년 미국 신시내티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널리 확산됐다. 현재 미국에서만 600여 개 대학, 10만 여 개 기업, 25만 여 명의 학생들이 코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12년 시작된 조지아텍의 코업은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조지아텍은 전 세계 3,20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4개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생들이 최소 3학기 동안 현장실습을 하도록 지원한다. 2011년 학부생 1,619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총 1,500만 달러(약 159억 원) 이상을 받으며 실무 감각을 길렀다.

미국 드렉슬공대도 선구적 모델이다. 모든 학생이 재학 중 1년간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현장실습을 한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 2011년 이 학교는 방문한 임 총장은 완벽한 4+1 방식이 자리를 잡은 모습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택형 5년제를 추진했다고 귀띔했다.

임 총장은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이 똑같은 잣대로 경쟁하면 발전이 없다”라면서 “에리카 캠퍼스를 산학협력의 최고 롤모델로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방송고e스쿨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절감형질의경영학교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http://www.isi.go.kr>



자기주도 학습전형
<http://selflas.kedi.re.kr>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http://mentor.kedi.re.kr/>

Drea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은 희망이고 인재는 미래입니다.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육,

미래사회를 여는 역량·지식·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1년간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세계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www.kedi.re.kr

